

第284回國會
(定期會)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11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9年11月19日(木)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2010년도 예산안(계속)
 - 가. 노동부소관
-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고용보험기금
 -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다. 임금채권보장기금
 -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審査된案件

- 1. 2010년도 예산안(계속) 1
 - 가. 노동부소관 1
-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 가. 고용보험기금 1
 -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
 - 다. 임금채권보장기금 1
 -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
 - 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1

(10시18분 개의)

○委員長 秋美愛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의사일정 제1항 노동부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노동부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한 노동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근로자복지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정부 측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정부 측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부장관님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

- 1. 2010년도 예산안(계속)
 - 가. 노동부소관
-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고용보험기금
 -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다. 임금채권보장기금
 -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10시19분)

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4회 정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부 소관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면서 일자리 증대와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노동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고용 상황의 급격한 악화에 대응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자리 나누기와 실직자 생계안정 및 취업 지원 등 적극적 고용안정대책, 사회안전망 확충과 근로조건 보호 등 취약계층 권익보호, 체계적인 노사갈등 관리와 실질적 노사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 등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용 상황을 보면 취업자 증가세가 3개월 연속 이어지는 등 일부 개선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일자리 회복 추세가 미약해서 아직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노동시장은 90년대 이후 잠재성장률이 점차 하락하고 경제성장률과 고용 간 연계고리가 악화되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구조적인 문제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대책을 내실화하면서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정책과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노동환경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했습니다.

2010년 회계연도 노동부 예산안은 일반 지출 기준으로 12조 319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금년 추경을 포함한 14조 6110억 원에 비하면 감소하였지만 당초 예산 11조 7547억 원에서 5644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총 지출은 1조 1692억 원으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1조 906억 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92억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67억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억 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8억 원입니다.

한편 내년도 노동부 소관 기금운용 규모는 여유자금 등을 제외하고 11조 1498억 원으로 기금

별로 살펴보면, 고용보험기금 5조 9281억 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조 6470억 원, 임금채권보장기금 2376억 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2327억 원, 근로자복지진흥기금 1044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정책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유지 지원, 실직자 생계안정과 같은 위기 대응형 사업은 고용 상황에 맞추어 조정하고, 단기 일자리는 정부 재정 의존도를 줄이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통계 인프라도 강화하겠습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여성과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서 체계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고용연장 및 원활한 전직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안전한 작업환경 보장에 만전을 기하고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차별시정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노조 전임자 재정자립,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등 2010년부터 개편되는 노사관계 제도가 산업현장에 정착되고 건강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노동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참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채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입니다.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국장입니다.

박화진 근로기준국장입니다.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입니다.

이재갑 고용정책관입니다.

임서정 직업능력정책관입니다.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입니다.

장의성 고용서비스정책관입니다.

이성기 공공노사정책관직무대리입니다.

정철균 정책기획관입니다.

한창훈 국제협력관직무대리입니다.

문기섭 대변인입니다.

장화익 감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모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원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기관장 인사)

다음으로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배 근로복지공단이사장입니다.

유재섭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입니다.

노민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입니다.

김선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입니다.

정인수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입니다.

김훈직 한국산재의료원 기획이사입니다.

허병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입니다.

전운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입니다.

(산하단체장 인사)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노동부 소관 2010년도 회계연도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기획조정실장 이채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기금(안)의 편성 방향, 그리고 총괄적인 내용 그리고 주요 특징, 세부 내용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10년도 예산·기금(안)에 대한 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경제 및 재정운용 여건은 최근 경기회복으로 2009년도 초 불황 국면은 벗어나고 있지만 고용시장 불안과 일자리 문제는 상당기간 계속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0년에도 일자리 창출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강화 등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노동 예산·기금 편성 방향은 첫째, 일자리 창출 지원과 고용서비스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일자리 및 디딤돌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 등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자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확대하고, 공공직업훈련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셋째, 취약계층 근로조건 보호와 고용·산재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체불임금 청산지원, 취약 사업장의 근로조건 자율 개선을 확대하며, 실직자·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넷째,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 건강한 노사문화를 지원코자 노사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한 노사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임금 직무 체계를 개선하고 작업장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내년도 노동부 소관 회계와 기금의 총 재정 규모는 20조 708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대비 4152억 원이 감소하고, 금년 추경을 포함한 21조 208억 원과 비교할 경우에 1조 1310억 원이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일반 지출 규모는 12조 3190억 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5644억 원(4.8%)이 증가가 됩니다.

예산은 1조 1692억 원으로 323억 원이 증가되고, 기금은 11조 1498억 원으로 5320억 원(5%) 증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입니다.

청년층의 취업촉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을 1065억 원으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지원에 251억 원,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지원을 92억 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및 디딤돌 일자리 창출에 1990억 원을 편성하고, 신규실업자 등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취업

지원에 800억 원, 그리고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에 1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불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 지원을 위해서 취약근로자 권리구제 강화에 38억 원, 비정규직근로자 장학금 지원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사관계 선진화에 39억 원, 작업장혁신 지원에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고용보험기금입니다.

대외경제여건 개선, 경기회복 전망 등을 고려해서 취업촉진수당 제도 개선 및 실업급여의 안정적 지원에 3조 5222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기업 고용유지 지원에 998억 원, 민관협력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고용지원서비스망 유지에 377억 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11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의 재직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에 4106억 원을 편성하고, 시장 및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전달체계 구축에 2019억 원을 편성하고, 직업훈련기관 평가 등에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일센터 58억 원,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에 18억 원, 직장보육시설 인건비 및 설치지원 확대에 369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고령자 일자리 대책 및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서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에 57억 원,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에 95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서는 산재보험급여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3조 6348억 원에서 3조 8205억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소규모사업장의 재해 감소와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재해다발·취약 사업장 집중관리 등에 183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노사 안전보건교육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등에 70억 원, 그리고 캠페인 실시, 선진화 기반 구축에 61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분입니다.

임금채불 근로자 체당금 증액을 편성하고자 하는데요.

도산사업장 체불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원에 2166억 원으로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사건 증가로 인한 취약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서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을 89억 원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입니다.

장애인고용 창출 및 중증장애인 고용 유지를 위해서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원에 1401억 원,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에 34억 원,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에 104억 원입니다.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관련해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에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고용 애로해소 및 양질의 취업지원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인식개선·연구사업에 26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는 중소기업근로자의 복지향상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근로복지포털 및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용보증대위변제는 2009년 추경예산을 통해서 확대 반영된 대부사업의 대위변제금 발생분을 감안해서 지원규모를 87억 원에서 359억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의 지원규모는 내실 있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업대책사업의 지원규모도 IBRD차입금 상환일정을 반영해서 축소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8쪽 이하의 2010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창희** 지금부터 2010년도 노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요약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노동부 소관 회계와 기금의 총 재정 규모는 20조 7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인 415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내용으로는 고용보험기금이 10.3%인 1조 405억 원이 감소한 반면 산재보험기금은 8.6%인 6880억 원, 세출예산은 2.7%인 32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전출금 및 기금 여유자금 등을 제외한 일반지출 규모는 12조 31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인 56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0년도 수입예산안은 전년대비 22.7%인 46억 원이 감소한 156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일반회계에서 22.7%인 46억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 수준이며, 세출예산은 총계 기준 1조 21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8%인 177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노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의 프로그램별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검토사항으로 먼저 2010년도 노동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부사업에 있어 기존의 세세항을 통합하여 25개 세부사업을 10개의 세부사업으로 정리하였으나 일부 통폐합 사업은 대상이나 목적이 서로 달라서 통폐합이 적절하지 못한 사업들로 보입니다.

노동부 소관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임금채권기금 등 3개 기금의 수입채원을 법률에 따라 동일하게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금관리 주체가 동일한데도 2010년 수입계획안 수립 시 근로자증가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기금계획안 작성 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쪽입니다.

고용정책사업 중 해외취업연수 사업의 경우 해외구인처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물량만을 늘리기보다는 우수인력 확보 및 우량 해외구인처 발굴 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체 비정규직 실태조사 사업의 경우 연 4회 분기별 조사로는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바 예산을 증액하여 월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

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의 경우 동 사업에 대한 참여수당 신설로 참여자가 다소 증가할 수는 있으나 2009년 집행실적이 참여수당 18.6%, 취업알선 위탁비 6% 등으로 실적이 저조한바 사업물량을 조정하고 예산의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직업능력 계좌제 사업은 훈련생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제재조치가 없어 중도탈락이 증가할 수 있어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있으므로 중도탈락 횟수를 제한하는 등 중도탈락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 훈련의 경우 대상자들이 훈련 후에도 전직을 결정하기 어렵고, 중소기업청의 성공창업패키지 교육과 중복성이 있으므로 동 사업의 폐지 또는 유사 사업과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제관리시스템 개선사업은 자격검정시험문제의 난이도를 3등급에서 10등급으로 세분화하여 합격률의 편차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시급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예산을 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사정책사업 중 지역노사민정협력사업을 계속하여 실시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보상금에 관한 법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장혁신지원사업은 100인 이상의 중견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 10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할 지원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작업장 혁신을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사업 중 주 40시간제 도입지원사업은 도입 대상 사업장이 영세하고 사업장 수 및 대상 근로자 수가 많아서 현재의 예산 4억 6900만 원으로는 효과적인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약근로자 권리구제사업은 매년 체불사건과 체불임금이 증가하고 체불사건 처리일수도 증가하고 있는바 신속한 체불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하여 민간상담인력 증원 등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부 소관의 5개 기금의 2010년도 총지출규모는 18조 8557억 5800만 원으로 추경 대비 4.8%인 9533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0년 수입·지출계획안 총 규모를 보면 9조 2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인 1조 406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여유자금 운용규모가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은 2007년 마이너스 5764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6쪽입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 적립금이 2006년 9조 3635억 원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경제위기로 인하여 기금 재원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출 대비 적립금 비율은 2009년 기금운용계획 지출액의 0.6,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 지출액의 0.7로 예정되어 있어 법정기준인 1배 및 1.5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7월 1일 시행된 고용보험법 제84조는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2010년 기금계획안에 따르면 동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제위기 시의 적정 적립금 규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보험법 제84조를 개정하여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정책사업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2009년도 10월 말 집행실적이 37%로 저조하므로 감액 조정이 필요하며, 민간취업기관지원 사업 중 훈련수료자 고용지원센터 예산의 경우 2010년 예산은 대폭 증액되었으나 사업성과인 취업률이 2.5%로 매우 저조한바 예산의 감액조정 등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전직실업자 취업훈련지원은 훈련수당으로 월 교통비 5만 원, 식비 6만 6000원 등 11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식비는 현실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성가장 실업자 등 훈련생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훈련비를 인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유급휴가훈련과 대체인력지원 사업은 2009년

신규사업으로 8월 말 현재 예산집행률은 46.8%로 저조하고, 유급휴가훈련비의 사업추진진척률과 예산집행률 간의 괴리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목표 인원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 대한 의견입니다.

하단을 보시겠습니다.

동 기금에 대한 검토 결과 보험급여사업의 진폐근로자 급여를 연금의 지급방식으로 개편하는데 따른 예상소요액 399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동 예산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나, 8쪽입니다. 동 법안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예산 전액이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에 대한 의견입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당초 계획안은 사업주의 부담금 비율을 5인 이상 0.4%, 5인 미만 0.2%로 산정하였으나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부담금 비율을 각각 0.45와 0.225로 조정하여 기금계획안을 산정하였는바 동 기금계획안의 부담금 비율은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기금입니다.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토 결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에서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단이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의 무상 임대 및 무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취업지원 사업의 시험고용 연수생의 임금이 월 60만 원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험고용 지원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검토 결과 근로복지포털사업 중 연구용역비의 경우 2010년에는 그간 2년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적절한 시점과 예산규모로 시스템고도화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운영지원 사업은 근로복지기금사업으로서의 부적합성, 관련 법규 미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일반

회계에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 존 함)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홍희덕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그러면 대체토론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희덕 위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여야 위원 여러분!

저는 지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 안건을 발의 올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상임위에서 의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의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노동부의 2007년 1월 감사에서 감사가 너무 허술하게 진행되었고, 감사 후 건물매각대금 993억 원에 대해서 미환수했으며, 보조금법을 위반한 상공회의소 책임자에 대한 고발과 노동부 관리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없었습니다. 매각대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이자수입 등을 멋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상의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한 후에도 정상대로 시정하지 않은 노동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직업훈련에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을 유용하는 단체들과 행정편의주의에 젖어 이를 방조하고 공공연히 두둔한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정부 회계질서를 정립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정감사를 위해 상임위에서 의결한 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도 제출하지 않는 노동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철도공사사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5조에 따라 고발을 의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노동부장관은 본 상임위가 9월 29일 서류 제출 의결한 서류 중 사단법인 노사공동고용지원사업단의 국고보조금 사용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습 니다. 지원사업단이 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상수도 위탁운영단가 세부산출내역, 논산 등 현재 위탁 운영되고 있는 15개 지자체의 상수도 위탁단가 산출내역서에 대

해 제출 요구를 받고도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은 공사가 체결한 철도역사 청소계약서, 변경계약서, 변경계약 요청서 및 그 부대서류, 원가 계산서를 포함해서, 이에 대한 제출 요구를 받고도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라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출 거부 사유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제출거부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서류 제출을 거부하여 국회의 국정감사 기능을 무력화한 기관에 대해 고발하여서 재발 방지토록 해야 합니다. 만약 국정감사를 위해 상임위에서 의결한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는 것을 그냥 놔두고 가면 앞으로는 국정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시시비비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3개 기관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민주당 김재운입니다.

홍희덕 위원님의 지적은 매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노동부가 이렇게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불법 부당함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고 방기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논의를 통해서 홍희덕 위원님의 뜻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태희 장관님께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는 부분과 그리고 5개 부처 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실상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임태희 노동부장관님은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제도는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3선 의원님이시고 또 여당 정책위 의장도 지내셨고 노동부장관이셔 가지고 노동부장관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고 국회의 권능을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헌법 제33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헌법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 헌법에 규정되고 있는 것을 장관님께서

법안은 국회에 가지 않고 시행할 것이고…… 이 법을 개정하고 안 하는 것은 장관님의 권한이 아니고 국회의 권한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방안은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행정법규로 만들겠다. 창구단일화는 이미 합의되었고 구체적인 방안은 장관에게 위임되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3항을 가지고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헌법상의 기본권을 시행령을 통해서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결사권을 시행령에 근거해서 교섭권을 제한하는 이러한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3선 의원님이시고 여당의 정책의장님까지 지내신 분이 이렇게 발언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국회의 입법권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리고 장관님 혼자 다 법 만들고 법 통과시키고, 장관님 하다가 빨리 이쪽으로 오셔서 가지고 환경노동위원장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지…… 이것은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 가지고 이 법이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하는 것이고 이 법을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 그러면 시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관님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며 우리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이런 일들은 철저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지난 17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5개 부처 장관들이 긴급기자회견을 열어서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일 내에 처리하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행정부가 법정기일도 지키지 않고 예산안을 국회에 넘겼습니다. 행정부 스스로 법정기일을 지켜서 예산안을 제출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독선적이고 오만한 처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예산 심의가 지체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가 자료 제출 제대로 안 하고 예산도 철저히 투명하게 제시하지 않고…… 하나 하나 항목별로 제시해야 우리가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뭉뚱그려서 총액계상으로 제출하는데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합니까?

그리고 정부 스스로가 국가재정법, 하천법, 수자원공사법 등등 여러 개 불법적으로…… 예산편성을 철저히 법에 준거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위법하게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심의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정인데도 정부가 국회를 향해서 예산 심의를 촉구하고 그리고 불법적인 재정사업 추진과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려는 것은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가 예산 심의를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여야 위원들끼리 의논해서 할 일이지, 지금 장관님이 물론 국회의원 3선 의원님이시고 또 대선배 의원님이시고 의정활동 잘하신 의원님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관님은 행정부 노동부장관님이십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우리가…… 국회 운영은 여야가 의논해서 할 일이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야 원내대표라든가 양당 간사간에 의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정부가 감 놔라, 대추 놔라 다 하면 국회 뭐 하러 있습니까?

그리고 과거 어느 정부가 장관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공개적으로 국회 예산 심의를 압박하는 전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하면 일방적으로 불도저식으로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노동부장관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기자회견해서 우리들을 꼭 위법한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 주실 위원님?

○**박준선 위원** 위원장님!

○**委員長 秋美愛** 예, 박준선 위원님!

○**박준선 위원**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님께서 워낙 좋은 내용으로 많은 내용을, 논점이 많은 것을 얘기하셔서 가지고, 제가 반박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를 앞두고 오늘 노동부의 보고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심사를 들어가는데 지금 노동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부 예산에 관련되어서 작년도도 그랬고 과거에 우리 의정 역사상 단 5차례만 법정시한을 지켰고 대부분은 법정시한을 어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들이나 또는 나라의 경제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정부에서 5개 부처의 장관이 국

회에다가 당부를 하고 간곡하게 호소를 하는 것이 가시화한 것이지,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었지만 그 기자회견을 보고 그것을 압박이라고 하거나 또는 부당한 어떤 간섭이라거나 이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만 해도 우리가 연말에 처리를 못 하고 연초까지 해서 상당히 폭력사태까지 가서야 예산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예산 집행하는 데 한 한 달 가까이 걸리고 더구나 작년에는 그래도 우리가 여야 간에 잘 합의를 해서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예산이 집행되어서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살아나는 데, 희망을 보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민주당이나 우리 민노당이나 야당에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희망이 정말 싹을 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또 하나의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과 우리 정부부처의 공무원들이나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 예산이 법정시한 내에 국회의원들의, 입법부의 심층적인 심사를 거쳐서 시간 내에 결정되기를, 그래서 정부의 어떤 사업이나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국민들과 우리 국회에 전달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지 그것이 국회에 대한 압력이라든가 부당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노동부장관의 어떤 특별한 답변을 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김재운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불법 부당한 예산 조기 집행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기준에 따라서 부당한 것은 삭감을 하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소위 말해서 4대강 사업이라는 하나의 큰 이슈를 가지고 국가 예산 전체를 볼모로 잡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이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정하고 부당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심의하면서 삭감하고 여야 간에 합의도 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 국가 예산은 적절한 시간 내에 결정되고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김재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이게 본질의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 장관님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좀 신중한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물론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법은 집행되고 시행됩니다. 하지만 법의 어떤 개정이나 이런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 같은 문제는 과연 그것이 입법사항이나 또는 행정규칙으로 또는 노동부장관이 할 수 있는 사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고민을 한 끝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본 위원도 조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노동부장관이나 노동부에서 그러한 판단을 했더라도 우리 국회하고 한번 상의를 하거나 또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언뜻 그렇게 국민들에게 행정법규로 하면 된다 이런 인식을 심어 주는 것은 신중치 못한 처사였다고 본 위원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이찬열 위원님!

○**이찬열 위원** 수원 장안의 이찬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이신 박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작년 예산안이 올 연초에 통과가 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걸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 중순 20일 이때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잡아 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지금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 갖고 계속 6자 회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시한이 11월 25일이라고 지금 임태희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론이나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 11월 25일까지는 합의 도출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월 25일까지 합의 도출이 안 될 경우에 그래도 장관님께서 정부는 안으로 강행을 하실 건지 또한 제가 들은 얘기지만, 이걸 근거는 없는 얘기입니다. 없는 얘기인데, 요새 흐르는 얘기가 강행처리를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신 몇 분의 위원님들을 다른 자리로 바꾸기까지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것은 국회의 일이지 장관께 할

얘기가 아니지요.

○이찬열 위원 혹시 그런 얘기를 요청하신 적이 있나 그런 얘기입니다.

○박준선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이찬열 위원께서……

○委員長 秋美愛 잠깐만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고요.

이찬열 위원님은 발언을 다 하셨습니까?

○이찬열 위원 예, 다 했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준선 위원님!

○박준선 위원 우리 이찬열 위원님께 축하인사가 늦었는데, 축하합니다.

그런데 이 국회에서 지금 여당 국회위원 상임위 보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이 관여할 게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와 원내 지도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해서 여당 위원 전체 그리고 장관 그런 것을 한꺼번에 모욕하는 그런 발언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지금 복수노조 문제와 그다음에 노조 전임자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해관계자가 설왕설래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회 입법부의 동일한 구성원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더구나 그것을 가지고 장관에게 질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장관이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박준선 위원 어허……

○김재운 위원 언론에 나오니까……

○이찬열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되셨습니까?

○이찬열 위원 예.

○委員長 秋美愛 그런데 사실은 지금 6자 합의가, 6자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까 박준선 위원님이나 또 김재운 위원님이나 다 표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선 장관께서 어떤 좋은 안이 나오기 전에 국회를 경유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행정법규로 대체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신 것은 우선 예산심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님들을 심히 자극한 바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좋은 안이 나와서 국회를 경유해서 법률안으로 가야지만 사실은 복수노조의 원칙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수노조라는 문제는 또한 창구 단일화를 노사가 동의할 수

있고 또 시행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으면 단체교섭권이라는 알맹이를 침해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헌법 위반 논쟁까지도 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논란이 있다면 아무리 원칙대로 시행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국회의 토론과 점검을 받으시 거쳐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관께서 선제적으로 국회를 경유하지 않은 뜻을 비친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각하게 지적하고 제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겠지요.

그래서 예산심사 앞두고 장관께서 그런 자극적인 발언으로서 우리 국회의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장관님의 입장을 제가 아까, 하나는 시행령으로 하겠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자회견 하신 것에 대해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委員長 秋美愛 예, 그러면 김재운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천 위원 제 질의도 있습니다. 질의 시간에 하세요.

○김재운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이 대답을……

○박준선 위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요, 본질의 때 하세요.

○委員長 秋美愛 자,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본질의 때 해도 돼요. 그 문제는……

○김재운 위원 본질이는 예산심의……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기자회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박준선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해 온 것도 있으니까 김재운 위원님이……

○김재운 위원 이것 대답하는 데 몇 분 걸립니까?

○박준선 위원 김재운 위원님이 그러시면 우리 여당 위원의 질의권을 침해하시는 거예요.

○강성천 위원 현안질의에서 합시다.

○김재운 위원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박준선 위원 아니, 우리도 할 말 있어요.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재운 위원 입장도 못 들습니까?

○박준선 위원 현안에 대해서 우리도 다 똑같은 내용의 질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조원진 위원 그건 아마 본질의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박준선 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저도 할 거예요.

○委員長 秋美愛 그러면 장관님께서 짧게 간략하게 입장 설명 좀 해 주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감사합니다.

우선 김재윤 위원님께서 입법권 무력화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의도가 혹시 그렇게 비쳐졌다면 그것은 아마 제가 표현을 잘못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만약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이 안 되고 지금 현행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논의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칙에서 노동부장관에게 창구 단일화에 대한 구체적 인…… 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절차와 방법 등을 강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정신에 충실하게 노동부장관이 준비하고 있다, 만약에 국회에서 그게 안 되면 노동부장관에게 부여된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창구 단일화 문제는 행정, 저희들이 일종의 법규로 시행을 하는데 그것은 물론 법 위반이 되는 행정법규는 처음부터 전제하지 않는다, 법의 정신이 충실한 행정법규를 시행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취지의 답변을 제가 한 것이 그렇게 알려진 거라는 말씀드리고, 이제 그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하신 교섭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거나 하는 것은 역시 그것은 법률에서 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절차적인 방법을 통해서 행정법규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법이 만약에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행정법규로 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법조문이 돼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특히 노동부장관에게 법률로 시행할 사항을 위임한 것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취지가 법 개정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만들어 와라, 이렇게 저는 위임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장관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준비해서 하여튼 시행 준비를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에 저희들 5개 부처 장관이 예산 처리에 대해서 빨리 좀 처리해 주십사 하는 호소를 드린 적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박준선 위원님께서도 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난해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최

근에 경제상황이 그래도 세계가 인정할 만큼 우리가 괄목할 만하게 이렇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국회의 협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국회에서 아주 대규모의 여러 가지 재정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이 부분이 사실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완전히 우리가 민간투자자까지 이어지려면 사실은 중간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 계속해서 우리 경제가 탄력 있게 회복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계속해서 좀 도와주십사 하는 일종의 호소의 성격이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일일이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서 한 것이 마치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그냥 국회를 압박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돼서 저도 나중에 그 보도를 보고 참 곤혹스러웠다는 점을 저 개인적 소견으로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秋美愛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홍희덕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거부의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지만, 홍희덕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처럼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국회의원이 감사 활동 차원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요구한 것이고 또 그 사용의 부적절성·불법성·남용성 여부를 감사하겠다는 국회 본연의 활동에 있어서 자료를 거부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요구한 자료는 장관께서 한번 더 지휘를 하셔서 왜 자료가 제출이 부실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라구요, 타 기관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시에 여야 간 감사님들이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의 국감활동에 자료 거부 있었던 일은 제대로 자료가 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그래도 거부한다면 그때 우리 위원회의 요구사항으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첫 번째 질

의에 있어서는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찬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찬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원 장안의 이찬열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28일 재선거에 국회의원으로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 선거 슬로건이 '4대강 막아서 서민 복지 향상에 돌려놓겠다' 그런 선거 슬로건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민경제 살리는 것과 또 교육복지 예산 늘리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역시 노동부 예산도 많이 감축이 됐는데 그것이 꼭 4대강 사업으로 갔다고 얘기는 드릴 수 없겠지만 현상적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사회가 거꾸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부 및 기관에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 후반으로 예상하면서 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양극화의 심화, 취업난 등 우리 서민들이 실제 겪고 있는 고통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런 점에 방점을 둔 듯 내년도 예산 관련 시정연설에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정책기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재원 배분의 최우선순위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서민을 따뜻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서민을 엄동설한으로 내쫓는 듯한 기분입니다.

장관님, 지난 11월 6일 장관님께서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며 이 같은 뜻을 담은 개칭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맞는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런데 저는 과연 장관님을 비롯한 노동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2010년도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예산이 2009년도에 비해 어떻습니까? 사회적 기업 육성 비용은 397억 원이나 삭감됐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340억 원이나 삭감되었습니다. 사

회적 기업 양성과 일자리 창출은 개인 또는 전체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계획된 것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근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이런 사업은 예산을 더욱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 수는 10월 말 현재 1만 9657명으로 노동부가 당초 목표한 1만 5477명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호응이 좋고 정부 지원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반증입니다.

장관님 이런 사업은 감액이 아니라 더욱 증액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주로 복지부하고 저희하고 간병 서비스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일자리로 하는데 복지부 쪽 사업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으로 하던 부분을 복지부 쪽으로 예산을 넘기면서 줄어든 부분이다, 예산 집행의 창구를 변경하면서 생긴 일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찬열 위원** 노동부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심사를 하지 않으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저희가 물론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러면 애초 사업계획 대비 매출액이 50%에 미달하거나 지원 받은 인건비 대비 매출이 20%에 못 미칠 때 재심사 없이도 바로 지원이 종료된다는 항목도 있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이찬열 위원** 저는 매출 기준에 의한 정량적 기준의 평가는 사회적 기업 양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꼭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우리가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자꾸 약화되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더 따뜻하고 촘촘한 공동체 서비스가 있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이 육성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

했습니다.

다만 내년에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금액이 줄어든 것은 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조금 상세하게 혹시 필요하시면 시간을 주시면 보충설명을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시간이 그러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고용 창출에 집중해야 할 노동부 예산에서 2조 5000억 원이 삭감된 것에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장관님, 고용 창출에 의지가 있으신 것으로 하는데 예산으로 보면 그런 의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주실 것인지도 한번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우선 그동안에 워낙 긴급한 상황을 맞이해서 재정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것이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대책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점차 경제가 나아지면서는 추경에서 긴급히 반영했던 한시적 그런 사업들은 줄이고 전반적으로 근본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게 기본방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고용과 관련해서 아주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것 이런 것들이 대체로 좀 줄어서 그렇게 된 사정을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는 최근에 실업급여가 감소하고 있다거나 여러 가지 고용지표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시간을 두고 그동안의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추어서 예산이 그렇게 조정되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여러 가지 줄어든 예산이 많은데 신규 실업자 등 직업훈련사업 예산도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446억 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니까, 장관님?

○노동부장관 임태희 이제 처음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이들이 그런 교육을 디딤돌로 해서 일자리도 잡아나가도록 하는 그런 정책 하에서 그런 예산들을 집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청년실업이나 특히 이런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아주 한시적 정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평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예산사업들로 진행된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좀더 효과가 좋은 곳으로 집중해서 지원하자 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일종의 중간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부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찬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훈련 수요자 취업률이 2007년도에 70.6%, 8년도에 64.9%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가 있는 예산을……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것과고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예산을 더 늘려서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새로 일자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인 것 같은데 장관님은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예산을 깎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금년도에 예산이 전반적으로 아주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의 추경을 기준으로 하면 예전보다 깎였고요. 그래서 작년도 추경 기준으로는 이런 예산들이 일부 감액 조정이 큰 예산의 틀 속에서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것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그동안의 평가 결과 한시적으로 운영해도 되거나 아니면 현행 제도 속에서 크게 사업을 위축시키지 않고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범위로 좀 짹짹하게 살림살이를 하려고 이렇게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짹짹하게 살림은 다른 데서 하셔야지 다른 부서도 아니고 노동부에서, 또 명칭까지도 고용노동부를 생각을 하시는 장관님께서 가장 성과가 좋고 그다음에 새로 취업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저는 100% 더 늘려도 된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예산도 혹시 4대강 사업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지요, 줄여가지고?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저희들이 하여튼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잡아줄 것

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정책평가를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청년들이 비교적 안정된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모으고 있는데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재정이 허용되면 정말 최대한도로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나중에 추경에서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안 중에 가장 큰 것이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예산을 보니까 2009년도에 1185억 원이 추경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집행 안 하실 것인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아예 이 비정규직에 관한 예산을 없애는지……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상적인 계약 기간이 혹시 유예되거나 늘어날 경우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추세가 혹시 법 개정으로 인해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함으로써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이런 장치를 함께 두어서 법 개정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자 하는 취지로 그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법이 그냥 그대로 시행이 됐고 저희들이 그동안의 통계의 추세를 보더라도 당초에 정부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 집행 없이도 정규직 전환으로 많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차별 시정을 좀 역점을 두고 추진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보완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예, 발언 시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천 위원님이십니다.

○강성천 위원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6자대표자회의 하셨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했습니다.

○강성천 위원 결과가 좋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동안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여하는 각 주체들이 구체적인 생각을 솔직하게 내 놓고 좀 토의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끝장토론이라도 해서 이 문제를 한번 합의를 해 보자 이렇게 해 놓고 내일부터 그 회의를 시작할 것으로 이렇게 서로 의견을 모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천 위원 지금 이제 예산안 심사하는 자리지만 지금 전임자의 복수 문제 이게 워낙 심각한 문제이고 아마 이게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우선 제가 예산 질의보다는 현안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 그리고 박준선 위원, 이찬열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복수노조 전임자가 어떻다고 하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장관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6자 회의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 집행 시까지 불과 40여 일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 6자대표자회의가 아무런 논의 진전 없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저희가 연착륙 방안을 좀 준비해 보자, 그리고 연착륙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연착륙 방안을 준비를 하고 또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 정신이 노사간에 뭔가 연착륙 방안을 좀 준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준비하도록 되어 있는 연착륙 방안을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정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촉구를 하면서 함께 내놓고, 왜냐하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내놓고

토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연착륙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가 되지 않으면서 논의가 그렇게 공전되었습니다.

○강성천 위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노동부가 협상 여지를 열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장 곤란하면 얘기 안 하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은 노동부가 과연 6자 대표자 회의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열의가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저희들로서는 시행을 하자, 다만 이게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제 연착륙방안을 놓고 연착륙시키는 문제를 논의하자 거듭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노동부가 합의에 대한 정성과 열의가 있다면 전임자 임금 지급 사업주 처벌이나 창구 단일화 방안을 규정하는 지침에 대한 얘기가 노동부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장관님 생각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으로 대변해도 되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런데 아까 처벌 문제 이런 문제들은 지금 아마 실무적으로 여러 의논 중의 하나인데 이게 마치 노동부 공식 입장인 것처럼 보도가 돼서 그 부분은 현재 결정되거나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아까 해명했듯이 행정법규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법이 그대로 갔을 경우에 창구 단일화에 대한 것이 아무 규정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신에 충실하게 창구 단일화 방안은 노동부장관이 준비를 해 놓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법규로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본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강성천 위원 장관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지요? 잘 아시겠지만 노동부를 통해서 나오는 지침의 내용이라는 것이 하나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 사용자를 반드시 처벌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전산입력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겠다는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창구 단일화 방안을 법률 개정 없이 행정법규로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상반기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법 위반 사업주의 사법처리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장관님, 0.01%입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임금을 안 주는 사업주의 사법처리율이 0.01%입니다. 노동부가 고민하고 있다는 전임자 관련 지침대로라면 사업주가 전임자 임금을 줄 경우 해당 사업주 모두를 사법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사업장을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제가 볼 때 무슨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공개하고 하는 것은 전혀 듣지 못한 얘깁니다, 제 스스로도,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글썄 어떻게 그런 게 나왔는지 저희 실무자들도 확인하기 어려웠고요.

○강성천 위원 장관님이 발언한 내용이……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 문제는 제가 발언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강성천 위원 없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강성천 위원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경총이 내년에 또 보급하겠다는 지침과 별 다를 바 없는데 이 부분 혹시 경영계와 장관님하고 뭐 교감이 있어서 같이 정리한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경영계하고는 아주 반대하는 복수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연착륙시키는 게 좋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가 내보라고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리고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방안을 행정법규로 만들겠다는 것은 장관님의 개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노동부의 생각입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조금 말씀드리면 행정법규로 준비해서 시행할 사항이 있고, 법률로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약 그대로 가게 되면

노동부장관은 어떤든 창구 단일화를 위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법규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부칙에 위반이지요, 강구토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니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안 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교섭권을 근본적으로 조금 제한해야 된다, 미국식으로. 예를 들어서 최소 교섭 단위를 일정비율로 제한한다든가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규정은 행정법규로 답을 수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것은 법으로 정해야 되는 규정입니다.

○강성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러나 그대로 시행되면 그런 것 규정하지 않고 절차와 방법만 단일화하는, 창구 단일화를 하는 절차와 방법만 저희들은 행정법규로 시행하게 된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성천 위원 여기에 대해서 노동계는 물론이고 국회와 학계에서도 노조법 원칙에 창구 단일화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부칙만으로 헌법상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법 본칙에 없는 권리·의무사항을 부칙에 근거하여 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다, 단체교섭 제한의 근거가 미비해 법정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하는 각계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지요. 장관도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거듭 말씀드리면 이제 부칙에서 정한 게 복수노조는 시행한다, 그다음에 그 유예기간이 끝나면 시행될 복수노조에 대해서 창구 단일화를 위한, 그러니까 창구 단일화가 그 당시에 논의를 통해서 이미 창구 단일화 방향으로 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창구 단일화 자체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을 국회에서 노동부장관에게 법률로 정해오라고 위임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창구 단일화를 결론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창구 단일화를 시행하기 위한 일종의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해라 이렇게 위임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그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천 위원 위헌무효 시비로부터 절대 그 문제가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요.

아마 법 개정 없이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되어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시행되면 사업장에 대단한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 가능성이 있는 지침을 통해 사업장의 노사교섭을 규율하겠다는 생각은 억지가 아닙니까? 장관님 여기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위험 가능성이 있도록 규정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워낙 여러 가지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연착륙은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연착륙의 방안으로 복수노조에 대해서는 창구 단일화를, 그다음에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해서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재정자립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회에서 지침을 정해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동안의 그런 노력들을 정부도 그렇고 노사도 충분히 해오지를 않았습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연착륙 방안을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안 해온 노력을 앞으로 제도 시행하면서 함께 노력해서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논의하자 이렇게 제의를 한 것입니다.

○강성천 위원 만약에 해당 지침이 위헌무효로 선언되고 나면 그 다음 사항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생각을 많이 했겠지요?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겁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강성천 위원 그리고 노동부에서 이런 지침 관련 발언들을 6차 대표자 회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지금 현재 계속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것은 어떤든 노동부장관에게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주어진 일종의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무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충실히 준비하겠다는, 그리고 노동부장관에게 주어진 창구 단일화의 방안과 방법에 대해서는 노사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강성천 위원 노동부가 지침도 지침이지만 장관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던 국제기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강성천 위원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합의도 안 되고 국회에서 논의 상황도 원활하지 않아서

법개정이 제대로 안 되어 현행법대로 시행될 경우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하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래서 제가 말씀에 지금 법에서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논의해서 해야지 지금 대안을 내지 않고 연착륙방안을 내지 않는 것은 진짜 지금 법 내용 그대로 시행하자고 하는 거나, 그것은 내년부터 바로 범위반 사태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아니면 이것을 통째로 또 유예하자고 하는 생각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착륙방안을 논의하자 이려는 겁니다.

○**강성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현행법대로 시행될 경우 수년간에 걸친 현장의 노조의 난립과 투쟁, 그로 인한 노노 갈등 증폭과 사업장 내 갈등적 조직문화의 만연, 경영상 의사결정 지연과 교섭비용의 증가 등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실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여 노사관계가 불안해지고, 사업장의 평화·공생의 분위기가 파괴된다면 노동부는 그 상황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장관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이 제도는 노도 그렇고 사도 그렇고 언젠가는 시행해야 될 제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른 생각을 갖는 경우가 드뭅니다. 시행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다만 문제는 현실이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제기하신 그런 문제들을 저는 노사정에서 논의하면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비용도 없이 아무런 자구노력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물론 노사정이 다 책임을 분담해가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연착륙방안들을 논의하면 저는 그 대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천 위원** 장관님, 본 위원은 현재 전투적·적대적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상생과 협력으로 갈 수 있는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정부가 개입해 노사관계를 재단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본과 노동은 항상 균형

을 이루어야 하고, 그 속에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장관 생각도 같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장관께서 직접 노조와 전임자가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나설 것이 아니라 미래 우리 사회의 노동운동의 방향까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시해서 우리 노사관계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택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권선택 위원** 권선택 위원입니다.

장관께 하나 묻겠습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임태희 장관은 지난달 17~19일에 싱가포르에서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 부장, 원동연 부부장을 만나서 남북정상회담 관계를 논의했다 이렇게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이 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보도가 돼서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을 한 내용 그대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권선택 위원**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다녀온 것은 사실입니다. 다녀온 것은 사실인데……

○**권선택 위원** 싱가포르예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거기에서의 활동은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은 못 드립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권선택 위원** 왜냐면 그때가 국정감사기간 중이었거든요. 다른 건과 관련해서 노동부의 국감기간 중의 해외출장 기록을 요구했었어요, 자료로서. 거기에는 장관님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베트남의 비나코리아 행사 여기 참여하겠다 그런 자료 결과만 있었거든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공식 출장이 아니고 이 문제는 제가 주말을 이용해서 비공식적으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권선택 위원** 공식·비공식 구분한 게 아니고 해외에 나간 게 있으면 달라고 했어요, 공식 출

장을 달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잘못 준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아마 공식적인 출장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권선택 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요, 장관님만 싱가포르 기록이 없더라고요. 국감법 있잖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으로……

○권선택 위원 그러면 국감법 위배한 거네요. 위배한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언제 말씀하신 건지,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외에는 특별히 다르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권선택 위원 하여튼 법에 대한 위반성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공식·비공식 포함해서 해외출장기록을 달라 했더니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노동 현안을 두고 25일까지가 시한으로 돼 있는데 25일까지 끝나는 것이지요?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선택 위원 지금 전망은 어때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최대한도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선택 위원 이것이 안 되면 연장시킬 수도 있어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연장 여부는 역시 대표자들이 합의해서—논의해서—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권선택 위원 오늘 신문을 보니까 정치권 일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시키겠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은 대기업의 경우는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중소기업은 일부 완화시키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검토된 게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권선택 위원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수노조에 대해서는 금지를 계속하고, 또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하는 것이 그런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마는 복수노조의 시행을 법으로 금지하는 사례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권선택 위원 그러면 전혀 검토할 만한 가치가 없네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이 부분이요?

○권선택 위원 예.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래서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올바른 방향 아니냐……

○권선택 위원 대안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권선택 위원 11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보셨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봤습니다.

○권선택 위원 어떻습니까? 비정규직이 늘었습니까? 어때요, 특징이 뭐예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단기 일자리대책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들이 줄 는 것으로……

○권선택 위원 보니까 정규직 채용도 증가세가 둔화됐고, 노동시간은 오히려 증가가 됐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는 오히려 심화가 됐다 이렇게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여러 가지 노동구조가 안 좋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권선택 위원 아주 나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정규직도 작년에 대비해서 0.6% 늘었고, 과거에는 4.3, 4.7%까지 늘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6만 명가량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증가세가 둔화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사실 재정의 투입의 효과로서 경제가 침체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는 모양을 보입니다마는 민간 부문의 활동은 아주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는—몇몇 부분을 제외하고는—계속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부문에서 늘어나는 여러 가지 일자리가 대개 기간제 중심으로 임시직이고 민간도 여전히 나쁜 상태로 있다, 그래서 민간 부문의 근본적인 회복까지 연결되려면 조금 더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권선택 위원** 전체 임금자는 2.3% 늘었는데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는 줄고 낮은 일자리는 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주 질적인 면에서 후퇴했어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선택 위원** 그러시고요.

비정규직 관련해서 예산 세운 것을 보니까 작년 수준하고 거의 같습니다. 오히려 추경을 포함하면 금년 예산의 절반밖에 안 돼요,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가 추경까지 포함해서 3982억입니다. 내년도는 1928억인데 그러면 추경을 예상하고 줄인 건가요, 전제해서?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게 아마 작년도에 편성되어 있던 정규직전환지원금이 실제 현장에서 당초 예상보다는 많이 전환이 되면서 그 예산이 정부 내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줄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권선택 위원** 그리고 이 의지를 볼 수 있는 것이 고용보험보다는 이게 일반예산이거든요. 일반예산의 경우에는 거의 늘지 않았어요. 거의 그 수준, 오히려 줄었네요, 줄었어요. 비정규직 근로자 장학금 지원금도 추경 포함하면 100억인데 금년에 50억, 하나 는 것이 비정규직 실태조사, 이것도 8억 확보했습니다. 이 8억 가지고 뭐 하겠어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여러 가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좀 차별시정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지금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따른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 금년 말로 종료가 됩니다마는 더 연장해 달라 하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 놓고 지금 당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선택 위원** 비정규직 예산이 대폭 증가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해외취업 지원사업 예산 중에서 고령자 해외취업 지원사업이 있대요. 이것 50세 이상을 6개월간 교육훈련을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해외취업사업의 경우에도……

○**권선택 위원** 이것 지난 국감에서 많이 지적됐거든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습니다.

○**권선택 위원** 그런데 오히려 고령자를 6개월 교육시켜서 취업을 시키겠다는 신규사업인데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고령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건강한 연배자가 많거든요. 50대 플러스 계층인데, 그래서 동남아의 개도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좀 경제개발 촉진 과정의 경험을 가지고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수요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취업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좀 실효성이 나도록 이걸 잘 좀 운영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은 좀 추진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선택 위원** 해외취업 지원사업 이것도 한 48억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삭감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고령자취업사업은 이게 수요도 조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타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경우에 충남, 경북, 전남이 지사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근 지역에서 커버하는 것 같은데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습니다.

○**권선택 위원** 정책을 좀 여러 분들이 나눠 쓰기 위해서는 이걸 지사 설립 문제가 검토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약 31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1억 정도가.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권선택 위원** 좀 검토해 주시고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1개소당 약 한 10~11억 원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권선택 위원** 다음에 근로감독관에 대한 주로 하고 있는 체불임금청산, 이것에 대한 운영비가 좀 대폭 증액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인데 이것 한 16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박대해 위원님이십니다.

○**박대해 위원** 박대해 위원입니다.

요즘 아주 현안인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는 본 위원도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고 또 조금 전에 우리 노동계의 대부이신 존경하는 강성천 위원님께

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고 또 장관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먼저 직업방송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직업방송은 실직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일자리 정보를 방송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동부는 동 사업을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에 50억, 운영비 2억 원 등 총 53억 66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동부는 현재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하루 3시간씩 한국경제TV 채널을 임대해서 방영하던 직업방송의 방영방식을 내년부터는 직업방송만을 위한 별도의 채널을 구성해서 방송하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렇죠?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대해 위원** 이 사업이 잘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현재의 직업방송체제가 지금 우려하신 것처럼 저는 그렇게 썩 효과를 못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 성과를 좀 높일까, 그러나 어떻게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 여기 가면 정보를 구할 수 있다 하고 이 프로그램을 좀 만들자 하고 제가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장관님께서 성과를 어떻게 하면 높일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장관님의 생각하고요.

뭐냐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직업방송 시청률이 극히 저조하다는 사실은 어제오늘 지적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번 국감에서도 이게 지적이 됐는데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청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7년에서 2008년 4월까지 직업방송 연평균 시청률이 0.1%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서 2009년 6월까지 시청률이 이보다 더 낮은 0.07%에 불과했습니다.

장관님, 애국가 시청률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3%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시청률이 저조한데요. 이 직업방송을 독립채널로 확대하는 게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지금 그런 지적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방적으로 그냥 방송에서, 거기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즉석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방송은, 일방적인 방송은 사실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PTV나 예를 들어서 DMB나 인터넷으로 상황이 연결이 돼서 좀 실질적으로 구인구직자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일자리로 연결이 서로 된다면 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프로그램을 그런 방향으로 만드는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대해 위원** 또 문제는 말이죠. 이뿐이 아닙니다.

직업방송의 독립채널로의 구상은 지금 현재 세계적인 흐름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미 지역방송 먼저 서비스 한 선진국들은 저조한 실적 때문에 TV방송 송출을 중단하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PBS 방송국은 성인학습 서비스를 2005년 9월에 중단을 했어요. 호주도 ABC 방송국의 평생교육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또 영국의 BBC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방송을 새벽 2시에서 6시에 방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노동부의 독립채널방송사업은 위험성이 너무 큼니다. 방송과 인터넷, DMB 등의 다양한 미디어 형태가 수시로 융합되어 발전하고 있는데 굳이 TV방송사업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노동부의 발상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별도의 독립채널을 구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차체에 동 사업이 꼭 필요한지 사업의 존재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할 그런 시기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많은 방송국이 직업알선 프로그램 등을 방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전문채널과 교육방송 등에서 직업 교육이나 알선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제도가 필요한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아울러 다른 제안을 하나 하자면요. TV방송보다는 아까 장관님도 잠깐 답변을 하셨습니까마는 100% 인터넷 방송으로 직업방송을 서비스하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적은 예산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시청률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죠.

○**노동부장관 임태희** 기본적으로 인터넷방송 쪽이 활용도를 높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령 인터넷에 많이 접근을 못하는 이런 계층들을 위해서는 뭔가 직업방송이 도움이 된다, 아마 프로그램이 되면 이게 굉장히 좀 효과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제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워낙 지금 일자리,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송과 인터넷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복합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해 위원** 예,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다음은 교대제전환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교대제전환지원금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노동부의 금년 예산과 동일한 61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2교대에서 3교대로 조를 늘리는 것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2004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박대해 위원** 취지는 좋은데 말이죠. 집행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 교대제전환지원금 집행실적을 보면 올 1월에서 10월까지 총 61억 원의 예산 가운데 19.7%에 불과한 12억 원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시행 실적이 저조한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장관님,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이 사업은 지난해에 여러 가지 금융위기 여파 또 그것에 따른 국내경기 침체 때문에 이 사업수요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워낙 일자리 자체가 막 줄고 있는 어려운 이런 상황이니깐, 그래서 지난 2007년부터 좀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내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증가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 하는 생각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깊이 있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심의

를 할 때 저희들이 자세하게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대해 위원** 예, 그런데도 지금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돼 있거든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박대해 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까지 저조한 실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뭐 불용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좀 문제가 있고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더 효율적인 부분으로 저희들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대해 위원** 방금 장관님 답변하신 대로 이 사업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수요 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고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교대제전환지원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대규모 생산라인이 있는 대기업들입니다. 실제로 2008년도 결산을 보면 집행사업비 가운데 85.9%가 대기업이 혜택을 받았습니

다. 그런데 한번 지원을 받은 기업은 또 이 제도를 보면 말이죠,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지난 200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이미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교대제전환지원제도의 수요는 급격히 더 낮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교대제 전환 시 임금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든 확실한 고용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본 제도의 수요가 낮아지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예산 61억 원은 과다 계상된 그런 측면이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감액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위원님 지적 말씀에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논의를 더 깊이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데가 있다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박대해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노동부는 동 사업에 13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산재 생활안정자금이 110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20억 이 증가됐고요. 요양비 대부사업이 25억 원에서 5억으로 올해에 비해 각각 20억 원씩 상향, 하향 이렇게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요양비 대부사업의 경우에 집행실적이 2008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0%입니다. 2009년 9월까지 0.6%로 극히 부진한 이 사업의 실효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25억에서 5억 원으로 20억 원을 삭감한 것은 적절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예산이 요양비 대부사업 20억 감액만큼 이렇게 줄어야, 같이 줄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올해와 같은 135억 원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양비 대부 사업에서 감소된 20억 원이 산재생활안정자금사업 예산에 20억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산증액이 된 사유와, 아마 이것 보니까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예산을 금년에 꼭 그대로 놔뒀는데요. 이런 사업비 증액방식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 장관님, 간단히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워낙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고 근로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요양비 대부사업은 조금 실적이 부진해서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을 좀 통합해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으로 해서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로 생활안정자금 대부 쪽으로 수요가 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항목을 그렇게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대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희덕 위원님이십니다.

○홍희덕 위원 홍희덕입니다.

장관님,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되었다시피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산재의료원, 이 두 기관의 비정규직 해고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폴리텍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오늘부터 1박 2일 농성에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고 KBS 비정규직, 한국보훈병원, 한국전기연구원 또 노동연구원까

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추운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장관님, 최근 한국도로공사 비정규직 116명 무기계약 전환된 것 알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보도 봤습니다.

○홍희덕 위원 동 공사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중 2009년 6월 30일 이후에 근속기간이 2년 이상 도래한 근로자 119명을 2009년 11월 2일자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했습니다. 노동부장관님으로 다른 곳은 차치하고서라도 공공기관만큼은 비정규직법의 취지에 맞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관님, 국감에서도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잘 아시다시피 기간제근로자법을 제정하고 나서 공공부문에서는 2007년, 2008년에 상당히 많은 인원들을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여러 가지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이런 계약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대개 기간만료가 되면 저희들이 연장의 필요성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에 그걸 그렇게 계약을 만료시켰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것처럼 아까 폴리텍의 경우에 지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래서 적어도 노동부 산하기관 만큼이라도 정규직으로 좀 전환을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기관은 차치하고라도, 노동부가 앞장서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최근 공공기관, 양대 노총을 다 비롯해서 단체협약, 노사관계가 아주 파탄으로 가고 있어요. 단체협약 해지 사태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금. 단체협약을 해지시켜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예요.

장관님, 공공기관의 무차별적인 단체협약 해지 사태를 중지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동부장관이라면 노동조합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관님의 일차적인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노동부장관 임태희 단체협약을 존중하는 건 맞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지를 해서 되겠나……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 단체협약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체협약을 분석해 본 결과 다른 부분에 솔선수범해야 될 공공부문이 위법하거나 혹은 부당한 이런 단체협약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정을 지금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홍희덕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관님, 노사 자율을 존중하시려면 단협부터 그렇게 정부가 재단을 갖고 노동부가 나서면 저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을 드리고요. 이런 비정규직들이 겨울을 맞아서 지금 길거리로 이렇게 나왔고 있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앞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예산에 대해서 특히나 비정규직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좀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그쪽으로, 비정규직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예산으로 확정했다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역노사민정 협력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예산은 저는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교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비가 17억 6000만 원이고 포상금이 9억 5000만 원인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존 보조율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보조합니다.

그런데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1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는 지역노사민정사업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국가보조금을 교부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법대로 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

○**홍희덕 위원** 이것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양해해 주시면 담당 실무책임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답변하세요.

○**노동부노사협력정책국장 전문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경제사회발전위원회 법에 포괄적인 법적 위임은 있습니다. 있는데, 포상금은 구체적인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지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포괄적 위임규정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

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집행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전직지원센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노사공동재취업센터와 전직지원센터 예산을 합한 것입니다. 이 사업을 모두 노사공동 고용지원사업단이 해 왔습니다.

2009년 전직지원센터 서비스 1인당 30만 원씩 책정됐던 것을 내년에는 서비스 1인당 60만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100% 증액된 것입니다. 100% 증액된 60만 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장관님, 답변해 보세요.

○**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의성** 고용서비스정책관 장의성입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세부항목 사항이라 자료를 제가 보면서……

○**홍희덕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세요.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갑자기 100%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의성** 그것은 전직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래 전직지원센터는 단가가 6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더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실지로 집행하는 것이 60만 원입니다.

○**홍희덕 위원** 아니, 올해는 30만 원 아니었어요?

○**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의성** 올해 30만 원은 노사공동재취업센터 것입니다.

○**홍희덕 위원**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의성** 예, 제가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혹시 이것 경총과 한국노총이 강력하게 증액을 요청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니지요?

○**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의성** 아닙니다. 그것은 노사공동재취업센터 예산 항목이 따로 있었고요, 전직지원센터 예산 항목이 따로 있었는데……

○**홍희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의성** 내년에는 그것이 통폐합돼서 하는 과정에서 단가 책정할 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상세한 내용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의성** 예,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전직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는 노사공동고용지원사업단의 국고 탕진과 도덕적 해이, 보조금법 위반 행위가 심각합니다.

노사공동고용지원사업단은 100% 국고보조금 130억 원 이상을 사용해서 노사공동재취업센터, 전직지원센터, 중견전문인력센터 사업을 하면서 그 영수증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국정감사 시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서류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 국정감사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 결산 증빙서류를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의성** 예, 그것은 노사공동재취업센터에 공문으로 제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홍희덕 위원**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의성** 예.

○**홍희덕 위원** 들어가십시오.

직업훈련수료자고용지원센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2009년 고용기금 심의 시에는 훈련수료자고용지원센터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이 확정된 후에 사업 시행 과정에서 영세자영업자고용지원센터, 신규실업자훈련이수자고용지원센터, 전직지원센터 등 일부 예산이 합쳐져서 직업훈련수료자고용지원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노동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의성** 고용서비스정책관 장의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내역상에는 없었는데 훈련 수료자의 범위를 그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사용 시에 훈련 수료자가 어떠한 개념인가에 대한 말씀을……

○**홍희덕 위원** 됐어요, 국장님. 어쨌든 국가가 예산을 책정해 준 것을 변경한 겁니다. 그렇지요?

동 구직자 대비 성공률이 2.6%에 불과합니다. 하는 일도 전직지원센터와 다를 바도 없어요. 수탁기관도 직업 유료·무료 소개업자입니다. 이 사업 예산은 삭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어차피 질의할 게 많기 때문에 그만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委員長 秋美愛**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李和洙 委員** 한나라당 안산 상록 갑 이화수 위원입니다.

장관님, 혹시 노동부가 수행하는 사업이 많아서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사업 종류는 많지만 저희들이 하는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런데 노동부 사업 중에서 정말 불필요한 게 많아서 국회에서 예산 좀 깎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산이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실적이 그렇게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사업에 편성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지를 감안해서 다른 부족한 쪽으로 돌려서라도 이렇게 쓰는 게 저희 노동부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째로 그냥 삭감할 예산은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李和洙 委員** 여기 기획재정담당관 있지요?

○**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 정지원** 예.

○**李和洙 委員** 앞으로 나와 봐요.

진급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

○**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 정지원** 이번 주 월요일자로 진급했습니다.

○**李和洙 委員** 보좌관들한테 노동부 사업이 많으니까 예산 좀 깎아 달라 이런 얘기했다는데?

○**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 정지원** 위원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李和洙 委員** 그러면 여기 보좌진들 데려다가 한번 발언 좀 시켜 봐요?

○**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 정지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냥 기재부와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관련된 예산은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특히 일자리나 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게 아니라 예산 깎을 사업 좀 얘기해 봐요. 이 사업은 불필요하니까 예산 좀 깎았으면 좋겠다는 그 사업이 있으면 얘기 좀 해 보시라고, 예?

○**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 정지원**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는 데……

○**李和洙 委員** 글썄, 지금 고위공직자가 됐으면 거짓말 시키지 말고 똑바로 얘기하고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고 그래야지 왜 자꾸만 말 돌리는 거예요?

○**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 정지원** 죄송합니다.

○**李和洙 委員** 암만 사석이라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함부로 하고 다녀요, 예? 그래 가지고 업무 수행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들어가요.

○**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 정지원** 예.

○**李和洙 委員** 장관님!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李和洙 委員** 노동부 직원들, 국민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특히 노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李和洙 委員** 저런 식으로 보좌진들한테 쓸데 없는 예산 많으니까 좀 깎아 달라는 이런 식의 얘기나 하고, 그리고 전임 그 앞에 장관 기금 막 써 가지고 지금 노동부 재산은 늘어났다고 하지만 감사는 감사대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혹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장관님이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얼마 전에 안산공단 방문하셨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랬었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런데 안산 쪽의 국회의원 넷이고 여당 국회의원 둘뿐이 안 되는데 그런 무슨 일 때문에 거기 내려가면서 좀 이렇게 알려 주고 그러면 어디 뭐 잘못됩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글썄요, 알려드렸다고 지금 그러는데 저도 그래서 참 당황했습니다.

○**李和洙 委員** 노동부 부하직원들이 장관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 하는 것 같으니까 각별히 주의

좀 주세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알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시간이 없어 가지고……

노동부 내년도 총 지출 예산 중 기금사업비 비중이 얼마지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기금사업비 비중이 대다수입니다.

○**李和洙 委員** 90.5%입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李和洙 委員** 2008년도 91.5%, 그러니까 일반회계 비중이 겨우 8%밖에 안 되는데 이 비중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러니까 기금사업의 비중이 너무 크냐 하는 말씀이시죠?

○**李和洙 委員** 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 비중이 61.6%,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는 38.1%, 그런데 노동부는 일반회계 예산이 8%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그야말로 근로자들을 위해서 운영돼야 되는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훼손돼서 그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늘 어떤 기금이든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점검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런데 초·중·고등학생·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직업체험관을 고용보험기금으로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李和洙 委員** 그런데 고용보험기금의 지원 대상은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였던 자, 그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초·중·고등학생이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이렇게 봐도 되나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사업이 시행 중이라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어떻게든 일자리의 서비스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토록 제가 지침을 내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

○**李和洙 委員**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재보험시설과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李和洙 委員** 그러면 이것 누가 낸 돈이에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글썽,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을 상대로 직업 체험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사업 목적을 내걸고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은 당초 일반회계사업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입장을 노동부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이게 예산당국하고 협의 그리고 나중에 노사정·학계에서 구성된, 학계로 구성된 고용보험전문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고용보험기금으로 처리를 하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사업 목적이 좀더 우리 근로자들의 일자리 중개나 일자리의 측면에서 보다 더 향상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구로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산재보험시설 부산동부지사 건립하는데 350억, 그다음에 충북 진천에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연수원 설립하는 것 98억, 그리고 한국폴리텍 신기술시설 장비 확충 440억, 기술대학 교구재 개발 23억 원, 노후장비 교체 88억 원, 이게 다 기금으로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용자나 노동자들이 낸 기금 가지고 왜 노동부에서 막 쓰고, 그다음에 공단 연수원은 노동부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노동부 재산은 늘려주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을 낸 사업주나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뭐냐 이것이지요. 이것 검토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알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한국노총에서 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 아시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들었습니다.

○**李和洙 委員** 노동부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째 동결되다가 내년엔 1억 6700만 원을 또 삭감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가 담당자가 파악해서……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렇게 한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和洙 委員** 이따 추가질의 때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운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재운 위원** 민주당 김재운입니다.

장관님!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김재운 위원** 장관님께서는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번 2010년도 예산도 일자리 창출 예산에 중점적으로 투입하려고 하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명칭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업무의 중점도 고용으로 두려고 합니다마는 예산 편성 시에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예산은 편성 당시부터 제 입장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관님이 일자리 창출에 가장 방점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고용노동부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보니까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자리 없어 가지고 청년실업 문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허리가 휘고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9년도 추경예산 대비 무려 1892억 원, 14.3%가 감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사업비만 1799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한 사업비를 분석해 보니까 고용정책사업 966억 원, 직업능력개발사업 864억 원…… 노동부가 일자리 창출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예산 2009년도 2336억 원 가운데 34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님 아다시피 청년실업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김재운 위원** 지금 청년실업률은 7.6%에 이르고 있고 청년고용률은 39.8%에 불과합니다. 청년 10명 가운데 6명이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100만 청년실업, 우리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청년실업예산 2009년도 1499억

원이었는데 342억 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장관님께서도 좋은 평가를 얻었다 이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대책예산 342억 원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사업 가운데 신규실업자 직업훈련비를 대폭 삭감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45억 원 가운데 무려 446억 원, 이것 뭐 엄청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래서 현 정부가 어떻게 일자리 창출하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의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한시적 일자리 대책들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고용 사정이 대체로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을 기초로 해서 했기 때문에……

○김재윤 위원 그러면 장관님의 전망을 통계청의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볼까요?

지금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난 비율은 0.6%에 불과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가 숫자는 지난해에 비해 5.7%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임금은 더욱 더 줄어들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이 지난해 129만 6000원이었습니다. 올해 120만 2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질 나쁜 일자리는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도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 시점에서 이렇게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고, 그리고 지난해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여러 가지……

○김재윤 위원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많은 편성을 해야 되는데 대폭 삭감하면서 장관님 어떻게 고용노동부를 만들겠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가 가장 중점을 뒀어야 될 것이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을 해야 경제도 성장되고 사회도 안정되고 국가도 번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부가 일자리 창출할 의지가 없습니까. 현재 예산 구조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현재 저희 노동부 예산에서 반영돼 있는 일자리 창출은 직접적으로 실업자나 일자리에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 측

면에서의 예산이고요, 이제 민간 부문의 사정이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민간 부문의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더 역점을 두자 이렇게 됐습니다.

○김재윤 위원 장관님이 고용노동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김재윤 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의 중심이 노동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걸맞은 인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거기에 걸맞은 예산의 편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여야 합의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 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단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5000억 원 편성할 예정이었습니다. 왜 2010년도 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비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2년으로 돼 있는 것을 유예하거나 혹시 늘릴 경우에…… 법이 원래 2년 만에, 정규직 전환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가 법이 그렇게 돼 버리면 비정규직으로 그대로 기간제로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 정부로서는 상당히 우려도 됐고, 아마 그 당시 여야 간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런 상태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그 법안을, 만약에 기간을 늘리거나 유예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금을 줌으로 해서 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 사용 기간이 는다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을 시키자 하는 정책 의지가 반영됐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장관님!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김재윤 위원 통계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은 급여도 줄어들고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고용의 안정을 이루어주고 최소한도로 비정규직 노동자 분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정부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 분들은 오히려 임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뒷받침하는 게 정부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이런 노력을 노동부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래서 사실은 기간제 근로라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디딤돌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으로, 그런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재윤 위원** 장관님!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김재윤 위원**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지금 통계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비정규직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줄여야만 고용의 안정이 이루어지고 기업도 살아나고 나라 경제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욱 더 늘어나고 비정규직 임금이 줄어들고 그러면 결국은 국가가 불안하고 결국은 경제성장이 더더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내년도 노동부 예산 20조 708억 원 가운데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6.1%에 불과합니다. 일반회계 1조 2150억 원입니다. 나머지 94%가 바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기금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일반예산의 비중이 10%를 넘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서 2010년도에는 예산안의 일반회계 비중이 6.1%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들이 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예산 구조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게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윤 위원** 결국은 노동부가 기금을 주머니 속의 쌈짓돈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금이 써야 될 곳이 있는 것이고 일반회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될 예산들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기금을 자기 주머니 돈 쓰듯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위원님 지적에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김재윤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준선 위원님이십니다.

○**박준선 위원** 한나라당 용인시 기흥구 출신의 박준선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관련한 질의에 앞서서 아까 본 위원이 잠깐 얘기를 하다만, 장관님께서 최근에 교섭단체 단일화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규칙으로 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잠깐 해 보자고요.

지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에서는 “노동부장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1항의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박준선 위원** 이 부칙 외에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서 아무런 법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없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면 이 부칙만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토론했습니다. 원래는 그게 본문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었다고, 그래야 정상적인 법제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칙의 정신은 어떻게 교섭단체 단일화를 전제로 하고 그 교섭단체 단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의 방법이나 절차는 노동부장관이 만들어라 하는 뜻으로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노동부장관에게 의무를 지운 것으로 해석해서 제가 행정법규에 대한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박준선 위원** 지금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고요, 그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위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박준선 위원** 그러면 법률에 위임하는 것은 명확하게 위임의 범위를 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데 명확성의 원칙, 소위 말해서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맞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박준선 위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은?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것은…… 말씀 계속 해주십시오.

○**박준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한다라는 어떤 법 정신을 갖다가 우리가 너무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전제로 한 행정규칙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법의 정신을 또는 헌법상의 단체교섭권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 그러니까 위헌 소지라는 것이 시비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행정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단체교섭권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는 내용은 법률로 하는 것이 사실은 자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 법을 만들 때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련된 것을 명문화하지 않은 것은 법률의 미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지적 말씀처럼 그것은 당연히 본문에 들어가서 있어야 되고 그 본문에서 정한, 예를 들어서 교섭단체 단일화를 위한 세부적인 방법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라 하고 규정하는 것이, 본문에 있어야 되는 것이 저는 정상적인 법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니까 본문에 정해 주지 않고 그다음에 부칙에 있더라도 부칙에 있는 규정 형식이 복수노조를 인정하되 그 교섭창구는 단일화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인지 이것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그것이 강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 아니냐……

저는 왜 이 점을 강조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노동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6자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떤 법 시행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단초를 갖다가 제대로 전제를 잘 깔고 시작을 해야지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하면 나중에 수습하기 힘들다는 말이에요.

작년에 쇠고기 파동 났을 때도, 미국 쇠고기 수입 관련해서도 그것이 결국은 입법사항이나 고시사항이나 이 부분 가지고 많이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것만큼 국민적으로 중요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법률로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통해서 서로 갈등을 녹여내고 서로 타협을 하든 다수결에 의하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없어지지, 이것을 그냥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 가지고 또는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 가지고 그걸 전제로 해서 행정규칙을 만들고 법을 시행해 버린다면 그 사이에 오는 혼란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견잡기 힘들고 또는 견잡을 수 없고 또 돌이키기도 힘들다, 그래서 지금 노동부에서 준비하는 것이 만약에 단일화를 강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준비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단일화를 강제하고 나서 그 단일화에 대한 어떤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그것을 진정으로 다수 조합원을 점한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을 점한 그런 조합으로 창구를 단일화할 것인지 또는 조합원 비율로 창구를 단일화할 것인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법률로 할 사항인데 강제조차도 여기에 명확하지 않은데 강제를 전제로 해 가지고 창구를 어떻게 단일화할 것인지를 행정규칙으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입법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만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운배 국장님 여기 계시지요?

○**노동부노사협력정책국장 전운배** 예.

○**박준선 위원**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 제가 장관님하고 나눈 얘기 들으셨지요?

○**노동부노사협력정책국장 전운배** 예, 들었습니다.

○**박준선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노사협력정책국장 전운배** 저는 일단 창구 단일화를 위한 방법과 절차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런 방법과 절차는 법으로 하면 가장 좋겠지만 행정법규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좋아요. 그 말대로라면 맞는데 내가 지금 전운배 국장님 불러서 물어보는 이유

는 창구의 단일화를 강제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칙만 가지고 창구 단일화 전제…… 지금 장관님 인터뷰한 것이나 또는 전운배 국장님이 대답하는 것은 창구 단일화를 강제한 것으로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창구 단일화를 강제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선부르게 경솔하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지금 참고로 부칙의 불명확한 형식의 이 규정 갖고 창구 단일화를 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창구 단일화에 의해서 문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죽 이어지는데, 25일까지 6자 회의를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하다가 만약에 국회에서 법에 의한 개정이나 이런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통과되지 않으면, 이걸 일단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다음부터 2인 이상이면 노조를 설립하느냐…… 노조설립 요건이나 또는 창구 단일화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좀 유리하게 또는 평이하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했다가는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 국장님!

○**노동부노사협력정책국장 전운배** 예.

○**박준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강제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법을 전공했지만 잘 아시잖아요, 법을?

이 부칙에서 이런 식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이 표현이 과연 단일화를 전제로 해서 강제한 것이냐? 그렇게 해석 못 한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노동부노사협력정책국장 전운배** 저희들은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조항이 본문에 있었으면 가장 좋았을 테지만 본문에……

○**박준선 위원** 아니, 이 조항이 본문에 있더라도…… 본문에 있느냐 부칙에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본문에 있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다 또는 강제한다, 단일화해야 된다—단체교섭에 있어서—라는 조항하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이 말은 틀리단 말이에요.

○**노동부노사협력정책국장 전운배** 저희들은 부칙도 본문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고 또 그간에 노사정의 논의 결과나 합의 결과를 봤을 때 창구 단일화는 이미 법에 하게 돼 있다……

○**박준선 위원** 그런데 그게 국민의 기본권과 본질적인 내용하고 좀 무관한 내용이거나 또는 절

차적인 내용이라면 가능해요. 그런데 이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내용과 좀 무관하고 멀리 있을 수도 있는데, 교섭창구 단일화의 문제는 단체교섭권이라는 노동3권의 기본 본질적인 내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위헌소지가 많은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가면 헌법에 대한 위헌으로 판결날 소지가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행정규칙이나 부칙을 만든다는 것은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노동부노사협력정책국장 전운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법·절차에 기본권의 어떤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위헌이나 위법의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행정법규로 만약에 한다면 그런 본질적인 침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준선 위원** 전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장관님!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박준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6자 회담이나 6자 회의 그리고 우리 입법부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정말 전향적이고 아주 바람직한 결론이 나온다면 참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이후에 어떤 최악의 경우에 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위헌소지를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어떤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조치를 취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히 ‘우리가 볼 때 이렇다. 이것이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해서 조치를 취해 나가면 나중에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 그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산심의 하면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노동에 관련된 가장 현안, 복수노조 문제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에 대해서 법 시행이 이제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사실은 6자 회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지켜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예산심의를 끝내고 가까운 장래에 현안질의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열어서, 우리 국민들도 6자 회의를 지켜보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노조 전임자 문제가 뭔지 잘 모릅니다, 사실 어

렵고. 그리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경총, 전경련 그다음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다음에 중소기업체, 대기업, 그분들의 생각들이 어떻게 틀린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환경노동 위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다른 일반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의 어떤 생각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노동부장관과 6자 회의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 차원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이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을 해서 최소한 하루 이틀은 넘어야 되고 한 일주일가량은 집중적으로 매일 열어가시고 한국노총도 부르고 경총도 부르고 해서 우리가 정말 난상토론을 벌여서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뭐가 옳은지, 뭐가 심각한지, 현실과 이상이 뭐가 틀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40여 일 놔뒀는데 노동부장관에게 맡겨 놓고, 6자 회의에 맡겨 놓고 그것이 과연 깨지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결국 그렇다면 법에 있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지금 이대로—그것조차도 우리 국민들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긴급현안에 대한 노조 전임 문제와 복수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가 열심히 12월 초 전후해서는……

6자 회의가 11월 25일까지지요, 장관님?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 이후에는 우리가 상임위를 열어 가지고 매일 회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한나라당의 조원진 간사님한테는 말을 했는데 간사 간의 협의와 우리 위원장의 어떤 그런 논의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또 필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6자 회의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국회가 논의를 수렴해 갈 절차를 밟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비정규직 때도 여러 차례 공청회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

다. 이번 복수노조를 비롯한 노조 전임자, 창구 단일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국회가 각계의 입장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공론의 장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구체적인 일정은, 위원님들께서 어제 아마 대체로 간사 간 협의를 통한 의사일정 고지를 들으셨다고 봐지는데, 12월 9일까지는 예산과 범안심사 일정으로 다 여지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 정기국회 끝나는 그 시점에 바로 이어서 우리 박준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을 간사 간 협의해서 일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김상희 위원님이십니다.

○**김상희 위원** 김상희입니다.

박준선 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요,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예산심의하는 이 와중에 노동부장관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법은 입법부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25일까지 합의가 되기를 기대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 법과 관련해서 우리 입법부가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노동부장관께서는……

지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다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방안과 관련해서 행정법규를 만들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으로 그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하게 또 다른 소모적인 논쟁을 촉발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동부장관께서는 6자 회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6자 회담을 오히려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행보와 그리고 언동이라든가 발언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행정법규도 지금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 하반기 들어서 친 서민정책으로 전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노동부는 지금 서민 관련해서 가

장 중요한 부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지적하셨지만 이번 예산은 완전히 서민을 소외하는 서민 소외 예산안입니다.

지금 일반회계의 주요 세부사업을 보면 취업장려수당,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청소년·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사회적기업 육성,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취약근로자 권리구제 강화 등 30%가 감액이 됐습니다, 2009년에 비해서요.

고용보험기금으로 보면 지금 열거하기도 숨이 찹니다. 고용조정지원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건설근로자고용지원금, 학교와 노동시장 연계지원 등등 해서 47.1%, 738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2009년 수정예산안에 비해서요.

이러고도 지금 이명박 정부가 서민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노동부가 서민을 그리고 고용 문제를 걱정하는 부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부장관께서 지금 이 어려운 시점에서 이렇게 예산 깎고 싶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결국은 추경예산을 감안해서 보면 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선 추경예산이 워낙 대규모였고 경제위기 예산이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경제 회복이 조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가 어려울 때 지출되는 예산을……

○**김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표로 보십시오. 지표로 보시면 지금 서민들의 생활이 나아졌습니까? 그리고 내년엔 아무리 경기가 좀 나아진다 하더라도 고용의 경기 후행성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너무 큰 폭으로 지금 감액을 한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저희들이 실업급여나 이런 것들 나가는 추이를 보면 조금씩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아주 작게나마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하여튼 저희도 물론 일자리 예산이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김상희 위원** 지금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 고용 문제나 일자리 문제가 어찌 노동부의 소관이겠느냐, 경제가 잘 되면 따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께서는 노동부에서 해야 될 역할을 고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노동부장관은 지금 경제부처 장관이 아니십니다. 당연히 경제의 그런 회복과 더불어서, 그렇지요? 경제 회복과 더불어서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노동부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노동부장관께서는 노동부장관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노동부 소관 대부사업이 얼마나 축소된지 아십니까? 전년 대비해서 6000억 원, 69%가 줄었습니다. 지금 노동부장관께서 할 말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무자들은 ‘대부 실적이 낮다’ 이런 얘기 하는데 대부 실적이 왜 낮습니까? 노동부가 일을 못 하니깐 낮은 것 아닙니까?

서민들이 일반 금융보다도 더 좋은 조건으로 대부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왜 이걸 안 쓰겠습니까? 몰라서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얼마 되지 않는 것을, 이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쓸 수 있게끔도 못 하는 것이 노동부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것을 69%나 감액을 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와 그리고 고용보험기금에 있는 서민예산 감소된 것 대폭 복귀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운용 대책에 대해서 지적들이 많으셨습니다. 목적에 맞는 사업비 지출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장관께서도 이미 시인을 하고 계셨는데요, 이게 지금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이 필요한 사업 내역을 좀 읽겠습니다.

종합직업체험관 신축 지원, 앞서도 지적했습니다. 비정규직 이동경로 조사, 노동시장 분석 및 직업 지도, 한기대 직업능력개발 노후장비 교체, 모성보호·육아지원, 근로복지공단 청사 건립, 인재개발원 건립, 이게 지금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장관님!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김상희 위원** 지금 출산을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출산율이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1.……

○**김상희 위원** 1.22, 세계에서 가장 꼴찌입니다, 지금. 알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맞습니다.

○**김상희 위원** 지금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경우에 이게 다 고용보험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녀고용평등 그리고 1가정 양육 실현 관련 사업들입니다. 왜 이 사업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써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출산율 낮아지는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도 언급을 하시고 총리도 언급을 하시고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로 문제 제기되고 있지요? 이게 언제적부터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내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내야겠습니까? 그것을 여기서 지원해야 됩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하여튼 저희들이 근로자들이 하는 거니까 근로자를 어떻든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고 이런 측면에서 아마 근로자 지원의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뭐 이래서 이런가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와 우리 노동부 간의 예산에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처음 도입할 때 일반회계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임시방편으로 했습니다. 이제 돌려 놓아야 됩니다. 이 출산율 가지고는 우리나라 존속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노동부장관께서 이런 것 신경 쓰셨습니까? 한번도 얘기한 적 없으시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어떻든 저희들이 여성의 일 참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이 사업은 건강보험에서도 분담을 같이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위원** 관련해서 노동부에서 오래 고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민 한번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이 문제는 그 동안에 어떻든……

○**김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은……

○**노동부장관 임태희** 함께 관계부처하고 의논해서 이 문제는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지금 고용보험기금에 정부 전입금이 102억 원입니다. 102억 원 전입해 놓고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 정말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비정규직 상황이 어떻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비정규직 규모 어떻게 줄이시겠습니까? 이것을 줄일 생각 없으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든 지금 말씀대로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위원** 그래서 비정규직을 지금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래서 2년을 늘리는 법안의 경우에도 고용동향을 더 보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일단 저희들이 입장 정리를 했고요.

○**김상희 위원** 그리고 아까 잘못 알고 계신데요, 지금 비정규직 기간을 2년 연장이나 유예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1185억 추정예산 준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관계없이 준 것입니다.

노동부장관께서 잘 모르시고 자꾸 그런 소리 하시는 거고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런 법안을 제출해 놓고 그 법안과 연계해서 이 예산을 쓰도록 그렇게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장관님께 제가 그것을 확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전혀 아무런 계획이 없으면서 차별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차별 시정 위주로 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어떻게 차별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차별 시정을 예산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위원** 법안은 뭘로 하실 것이며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 얼마입니까? 예산부터 얘기하십시오.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

들이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전부 예산으로 해서 차별 시정할 수 없습니다.

○**김상희 위원** 어떻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산을 한 푼도 안 쓰시려고 하십니까?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는 것도 예산을 쓸 수 없다, 차별 시정하는 데도 예산을 쓸 수 없다, 노동부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차별 시정 예산이 지금 8억입니다.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진 위원님!

○**조원진 위원** 비정규직 차별 시정 부분 자꾸 나오는데 예산 다 읽어보면 비정규직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비정규직에 대한 항목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국정감사를 왜 하는가 의문이 들 정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여당 간사면서도 분통이 터져서, 국회의원이 하는 국정감사를 무시하는 이 썩어빠진 관료집단들, 관료주의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도 많습니다.

장관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예산 반영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고 각 단체의 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었으면 예산으로 반영을 해야지요. 그냥 국정감사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위원들이 그걸 체크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 부분은 혹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우리나라 관료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운찬 총리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관료마피아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결국은 몰락합니다. 3대 관료마피아 국토해양부, 기재부, 지식경제부 거기에 노동부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이런이런 예산이 왜 필요합니다, 꼭 해야 됩니까라고 얘기했는데 예산 항목에서 다 빼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잡아 놓은 예산 다 빼도 됩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조원진 위원** 제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년 동안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머리 다 빠질 정도로 힘들었지 않습니까?

분명한 얘기는 모집단이 없다, 우리나라에는 모집단 자체가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흐트러진 것입니다.

혹여는 560만, 혹여는 900만, 그리고 현재 비정규직 2년에 해당하는 모집단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모집단 조사를 하기 위해서 80억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거 얼마나 됐습니까? 장관을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산 넣겠습니다 해 놓고 7억 주었습니다. 하지 말자는 거지요?

우리 담당 국장님 좀 나와 보세요.

자, 우리 통계 하지 말까요, 그러면?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고용정책관 이재갑입니다.

○**조원진 위원**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통계청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합쳐서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복지 예산에 혈세가 잘못 갈 가능성이 많습니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노동성이 갖고 있는 자료만큼은 아니더라도 내년 한 해 동안 조사를 해서 이 통계를 가지지 않으면 내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라고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맞습니다.

○**조원진 위원** 얼마 예산 올렸습니까?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두 가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조사에서 모집단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그때 많이 도와주셔서 통계청하고 사업체총조사에서 기간제 항목을 집어넣어서 전수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부 자체에서 사업장 조사를 통해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동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매월 조사하는 것으로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매월 조사를 하려고 하면 표본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3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

는 것으로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조원진 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장관계서 예산실과 협의하십시오.

○**노동부장관 임태희** 알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이 문제는요, 80억의 문제가 아니고 1차, 2차에 나누어 가지고 사업자 비정규직 실태 조사가 39억이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이동 경로에 대한 조사, 비정규직 형태 변화의 조사가 41억입니다. 80억입니다.

기재가 이 정당한 80억을 안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노동부에서 알아야 됩니다. 왜? 명확한 통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예산을 달라고 하기 겁내기 때문에 안 하려는 거지요.

이 부분은 장관님한테 맡기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해 주셔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억이 아니고 80억입니다. 두 가지를 다 해야지, 또 한 가지는 통계청에서 지방자치단체 하고 하는 전수조사 세 가지를 해야지만 정확한 모집단이 만들어집니다.

모집단이 만들어지지 않고, 우리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디에다가 돈을 쓰겠습니까? 통계집단이 안 나와 있는, 모집단이 없는 데서, 대한민국 전체에 인구가 없는데 남녀 비율을 어떻게 비율을 어떻게 뽑아 가지고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조사를 하자는 취지거든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지금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 통계조사와 관련해서 통계청하고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뒤늦게 반영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통계를 저희들이 예산 부족으로 못 하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이 통계는 기재에서 말이지요, 기재는 항상 그렇습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위원** 본인들이 80억의 문제가 아니고 8000억, 8조를 넣어서라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 이 통계입니다. 80억을 못 주겠다고 8억을 주었습니다, 7억 9000.

통계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감사합니다.

○**조원진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개요에 보면 비정규직 건설 근로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이게 얼마입니까? 100억에서 '제로'가 되었거든요.

담당자 누구입니까?

왜 순감이 '제로'로 되었지요, 100억에서?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고용정책관 이재갑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건설근로자 기능 향상 훈련 교육은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한시적 사업으로 시행을 하면서 만족도가 높고 반응도 매우 좋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당국의 예산편성 지침이 추정사업으로 편성이 된 한시적 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반영하지 않는 것을 예산편성 방침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이 빠졌습니다.

○**조원진 위원** 자, 그만하시고요.

머리 잘 돌아가는 기재에서 자꾸 그런 얘기 하는 모양인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글로벌 청년 취업 프로젝트의 1인당 취업률을 따져 보니까 1명당 5000만 원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조원진 위원** 통계 따져 보니까 외국에 불려서 글로벌 청년 프로젝트 만들어 가지고 1인당 취업률 따지니까 5000만 원이 들었는데요, 지금 비정규직 건설 근로자 취업능력 향상은 일취 근로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취'가 뭐냐, 하루하루 취업을 못해서 새벽에 나가 있는 분들 있지요? 그분들 중에서 일자리 못 얻어 가지고 그냥 있는 분들을 모아 가지고 하루 근로자 취업을 하도록 해서 교육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노동부 간부 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귀찮더라도 그거 하셔야 됩니다.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조원진 위원** 거기서 조사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80%가 새벽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체크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러니까 올리는 자체를 이거 효과가 없다고 올리는 거예요. 다른 데 다 없어지고 대구 한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예산 '제로'로 주면 동절기에는 그러면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안 먹고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글로벌 취업 지원하고 말이지요, 비정규직 건설 근로자하고 비교가 되어도 너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감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지적을 해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해서 살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글로벌 취업 지원은 증액이 되었어요.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48억씩은 증액되고 나머지 이 프로그램은 '제로'가 되었어요.

이게 탁상행정이라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가정들이 있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탁상행정 식으로 '아, 그거 필요 없으니까 추경에 했으니까 본예산에는 빠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론을 가지고 그것을 타파를 해서 예산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중도실용·서민정책 쓴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밑에 내려가 보면 그게 피부에 안 오는 것입니다.

이거 좀 바꾸어 주시고요, 오늘 이 예산 하시는 데 들어오셨으면 장관께서 국감에서 각 상임위원들이 어떤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했는지 챙겨 보셔야 됩니다.

조원진 위원은 어떤 질문을 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한번 보고 싶은데, 참 국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도 참 의심이고 노동부에서 올린 예산 정말 증액이 아니고 삭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니까 이거 내일 소회의 들어가기 전에 조사하셔서 안 된 것 다시 가져오십시오. 증액해야 될 부분 증액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대체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토론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찬열 위원님부터 하시고 시간도 10분씩 질의·답변 포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4대강을 막는다고 해서 우리 수원장안구 구민들이 이 자리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장관님, 지금까지 오전에 선배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보고 또 저도 했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산에 대해서 노동부장관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나와 있는 예산안의 방향이 과연 맞느냐, 장관님이 언제부터 노동부 일에 관여하셨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9월 30일부로 임명됐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은 벌써 다 되어 있었을 때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이찬열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고 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장관님 얘기는 노동부 이름까지 '고용노동부'라고 만들고 싶은데 이미 짜여진 예산은 노동부 예산만도 못한 예산을 가지고 장관님 생각하고 이것을 맞춰 들어가려니 모든, 저나 선배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일안 하는 노동부로 비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산 자체가. 이거 줄어드는 게 한두 가지래야 늘리지……

장관께서는 고용노동부라고 바꾸려고까지 그러는데 아래 일하는 분들은 노동부도 안 되도록 예산을 잡아 났으니 이거 뭐 예산 심의가 되겠습니까?

이게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답답한 마음.

그런 와중에도 한 가지 는 것은 있어요.

장관님, 예산 중에 신용보증대위변제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1분 이내로.

처음이라 아까 설명을 길게 하시는 것을 그냥 놔드렸더니 나중에 보니까 제 시간이 다 없어졌어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대부사업을 해서 신용보증을 해 줬는데 결국 부도가 생겨서 대신 갚아 줘야 될 돈입니다. 많이 어렵다 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찬열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87억에서 359억으로 늘었습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건 왜 늘렸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것은 부도가 나면 갚아 주기로 하고 신용보증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법

적 의무가 있어서 예산에 불가피하게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찬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책임회피성 예산뿐이 더 됩니까?

물론 지금 장관님도 속으로 '이거 내가 있을 때 안 했는데 정말 답답하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359억이라는 예산은 완전히 일 아무렇게나 처리해 놓고 부도나면 예산 있으니까 예산 갖다 집어넣어 주겠다 이런 계획인 것으로밖에 본 위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취약 부분에 대한 지원이 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또 정상적으로 희생한 데도 있고 어려워진 부분도 있고 한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찬열 위원 아무리 취약 부분이라도, 다른 거 고용 부분은 취약 안 한 부분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최소한 87억보다 줄어들어야 저도 할 얘기가 없지요.

이런 사람들 책임회피성 예산은 몇백%가 늘어난 겁니까? 지금 400% 이상 늘어난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400% 이상 늘어나게 하고 실질적으로 서민과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은 30%, 40% 다 깎여 내려가고, 이게 어떻게 노동부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한다고 우리 서민들이나 노동자들이 볼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깎인 예산은 그러면, 한두 푼도 아니고 깎았다 하면 400억, 500억 깎았는데 깎은 건가? 스스로 줄인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예산이 4대강 사업으로 안 간다고 누가 장담하겠느냐 이거지요.

정말 2009년도 노동부 예산은, 저는 국회에 들어온 지 며칠 안 됐지만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을 과연 장관님의 뜻에, 어차피 취임을 하셨는데 장관님이 추구하는 이상을 갖다 실현시키기 위한 예산을 어떻게 다시 조정해 가지고 여기서 받으실 건지 그것이 제가 봤을 때 가장 관건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야 이렇게 됐지만 밤새도록이라도 해서 서민과 중산층,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을 여기서 증액을 시키십시오. 그거 하셔야 됩니다.

예산심의 받는다 고 '이거 잠깐 지나가면 그만이지' 생각하지 마시고 9월 말에 오셨으면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시기적으로·물리적으로 안 되는 건데 지금이라도 담당 국장들한테 오더를 내리세요. 최소한 작년도 수준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한두 가지 항목은 불가피하게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전부 서민예산, 노동자예산 다 이런 건데 그것도 다 나랏돈인가, 어떻게 보면 사업체하고 노동자들이 낸 기금 가지고 운용하는 게 아까 노동부 예산의 90%라면서요? 그런 것을 지금 같은 시기에 써야지, 이거 일 안 하려고 하는 예산으로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차관님 여기 안 계신데 차관 이하 다 일 잘못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밤을 새서라도 예산안을 바꾸어서, 장관의 뜻이 그러면 밤을 새서라도 바꾸어서 여기 제대로 된 예산안을 갖다 봐야지, 얘기는 장관님한테 전부 그럴 듯하게 해 놓고 와서 이게 예산 심의하는 겁니까? '예산을 왜 조금 잡았느냐?' 이거 창피한 얘기입니다.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예산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 빨리 정리하셔 가지고요, 여기 나오는 노동부 예산은 부자들을 위한 예산이 아닙니다. 다 우리 서민들, 노동자, 중산층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밤을 새서라도 수정안을 갖다가 다시 소위에서, 아까 조원진 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 하셔야 됩니다. 이것 했다고 그냥 이대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노동부 있으나 마나예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 예산인데, 고용예산이고 고용창출 예산이고, '이런 걸 지금 4대강 사업에다 쏟아 부으려고 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얘기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이것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예산 잡힌 것만큼 경제가 좋아진 것 아닙니다.

수원에 파장시장 어떤가 한번 가 보세요, 조원 시장 한번 가 보시라고요, 거기 상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가슴이 미어집니다, 가슴이.

하여튼 최소한 2010년도 예산은 2009년도 추경 예산선까지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밤새서 가지고, 내일 소위를 연다고 그러

시는데 소위를 차라리 하루이틀 연장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 조정 다시 하세요. 이것 2010년도 노동부 예산 며칠 안 된 국회의원 눈에도 다 보입니다.

이삼십 년씩 하신 분들이 잡아 놓은 예산이 겨우 이거라면 본 위원은 내년도 일 하나도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秋美愛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천 위원님이십니다.

○강성천 위원 한나라당 강성천 위원입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그 부분이 전년 대비,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줄어 들었습니다.

○강성천 위원 전년 추경 대비해서는 줄지 않은 거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추경 대비 준 거지요, 현 예산 대비 늘고.

○강성천 위원 본예산 대비 는 겁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강성천 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께서도 얘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는 노동자 출신 위원으로서 우리 서민들의 생활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이런 점에서 우리 노동부 직원들께서도 고생들 하십니다마는, 좀더 분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은 일반적인 경우에도 타당하지만 장애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실시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서도 일자리가 장애인의 일상생활 만족도를 높인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러나 우리 장애인 고용 실적은 아직도 초보 수준입니다.

지난 12월 말 기준으로 등록 장애인 수는 225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실업률은 9.5%로 일반인에 비해 3배 가량 높습니다. 특히 최근 고용 위기 상황은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물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관심은 관심으로 그치고 구체적인 정책과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말뿐인 구호로 전락할 것입니다. 장관님 여기에도 동의하시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여러 가지 정책 개발을 하고 예산들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천 위원 본 위원이 2010년 장애인고용기금으로 수행되는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을 살펴보니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제외하고 표준사업장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지원, 장애인취업지원사업,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사업,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6개 사업 예산은 올해 예산에 비해 10%p나 줄었습니다. 6개 사업의 예산이 2008년에 약 455억 원이었다가 올해 400여억 원, 내년에 367억 원 규모로 감소했습니다.

장관님, 예산을 증액해도 모자랄 판에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장애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충분히 들어가도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비해서 약 5.6% 전반적으로 늘기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항목의 경우에는, 또 장애인고용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많이 늘렸거든요, 10%. 그다음에 고용관리비용 지원도 늘리고. 그 대신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줄어서 항목 간에 조정은 일어났습니다마는……

○강성천 위원 알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저희들이 제한된 재정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계속해서 여력이 되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천 위원 개별 사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지원을 줄이거나 그대로 둔 채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의 부실 운영이나 수혜 대상 편중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실적을 올리기 쉬운 경증장애인이나 남성 장애인 등에게만 그 효과가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도 조금 여러 가지 제도에서 소외되는 계층들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데는 줄이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강성천 위원 특히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은 사업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보조공학기기 지원 후 사용 전 대비 47.6%의 생산성 향상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이에 따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강성천 위원 장애인은 장애 유형에 맞는 직업 훈련을 하게 되면 취업이 좀더 용이하기 때문에 장애인 직업훈련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관님 맞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현재 기업맞춤 훈련이나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등의 장애인 직업훈련은 공단의 직업능력개발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적인 장애인 직업훈련은 공공·민간 훈련기관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훈련의 경우 취업률이 약 80%로 높고 공공기관이나 민간훈련기관의 경우 각각 50%와 30%대로 다소 낮지만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사업 효과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효과가 높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면 사업이 본 궤도로 오를 수 있게 정부는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님,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정부가 좀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게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공단도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고용을 지원하라고 기금을 주는 것이지 공단 직원들 해외연수나 보내라고 그 돈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업 예산을 변칙적으로 운용해서 직원들과 일부 업체 직원들을 해외에 보낼 돈이 있으면 그 예산을 아껴서 장애인직업훈련에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고용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이 지금보다는 대폭 증가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업들이 내는 장애고용부담금에 의존하는 사업으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장관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워낙 이 부문은 모든 부문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부문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의무고용에 관한 법률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의무고용을 못 하면 결국은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강력하게 운용하면서 거기에 재원을 마련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으로 부족한 부분의 경우에는, 역시 장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회적 부담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도 필요하다면 더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강성천 위원 근로복지공단에서 2005년부터 맞춤형서비스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직접 찾아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따뜻한 행정서비스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세부 사업으로 부정수급조사 활성화사업이 추가됐습니다.

장관님, 이 사업이 맞춤형서비스 사업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강성천 위원 단지 산재라는 공통점만 있을 뿐이 두 사업의 성격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내년 구입 예정인 장비를 살펴봐도 망원 줌 카메라, 고성능 녹음기, 무전기 등 따뜻한 이런 서비스와는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동의합니다.

○강성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금의 부정수급을 조사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보험조사팀을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들었습니다.

○강성천 위원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으로 합법적으로 인원과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임시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보험조사팀 운영비를 부정수급조사 활성화사업 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 맞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강성천 위원** 부정수급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수급조사팀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정부에 떳떳하게 요구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강성천 위원** 조직을 임시적으로 구성하여 제대로 운영도 하지 못하면서 다음해 예산에 몰래 끼워 넣어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업 끼워 넣기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2010년도 부정수급조사 활성화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므로 노동부는 자세한 현황화 관련 대책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부정수급 문제가 일선 창구에서 이게 참 여러 지적에도, 위원님들 지적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더 저희들이 철저한 감독 그리고 집행자들에 대한 철저한 윤리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을 줄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委員長 秋美愛**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희덕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장관님, 노사관계 선진화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노사관계 선진화 예산으로 38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사관계 선진화 홍보비만 16억 100만 원입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174만 7000명입니다. 올해 부가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10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최저임금 교육홍보비는 겨우 2억 2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노사관계 선진화가 급한 것이 아니고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만큼이라도 홍보를 통해

서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홍보 예산의 증액이 절실합니다. 오죽했으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건의문을 냈겠습니까?

최저임금위에서 대정부 건의한 거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들었습니다.

○**홍희덕 위원** 장관님, 노사관계 선진화 홍보비 16억 100만 원을 최저임금 홍보비로 전환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내년도의 노사관계 선진화 홍보비용은 사실은 저희가 무슨 정책내용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복수노조 문제, 그다음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 이 제도 시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활동 예산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홍희덕 위원** 최저임금에 대한 홍보비가 늘어나야 된다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시는 것 아닙니까? 210만 명에 이르는 분들이 잘 몰라서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현실적으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칫 또……

○**홍희덕 위원** 장관님, 지금의 노사 선진화 홍보비 좀 줄여서 최저임금 홍보비로 전용하시는 게 어떠냐를 묻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하십시오.

다음은 한국폴리텍대학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에서 인력개발사업 내에 한국폴리텍대학 운영비로 172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별도로 경상운영비 항목에서 기관운영비라고 해가지고 또 12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왜 나뉘어져 있습니까? 나누는 이유가 됩니까?

그리고 일반회계 노후시설 보강 예산으로 올해는 45억 7500만 원, 내년에도 45억 7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예산 중에 올해는 14억 8000만 원, 내년에는 13억 2600만 원이 사용처가 특정되지 않고 법인 긴급재해복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폴리텍대학 실행 예산 항목명세서에는 법인의 긴급재해복구비가 3억 2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11억 5400만 원이 다른 곳으로

어디 가고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철저하게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노후시설 보강사업비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법인의 긴급재해복구비, 따라서 이 13억 2600만 원은 저는 삭감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간단한 것인데요, 올해 예산에는 각 지방청 별로 연합뉴스 월 구독료가 400만 원씩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내년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누가 답변 좀 해 보세요.

담당하는 분이 없습니까? 장관님께서 답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노동부장관 임태희** 잠깐만 시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덕 위원** 시간 다 가잖아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저는 연합뉴스 월간 400만 원이라는 것도 정말 황당하고, 그런데 갑자기 이게 왜 없어졌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청년리더양성.

앞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해외취업연수 관련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소위 글로벌 청년리더양성사업인데요, 장관님, 저는 이 명칭부터 청년해외취업연수로 통일하는 게 어떻습니까? 목적이 더 분명하고 명쾌하지 않겠습니까?

2009년 연수 계획 인원이 5125명이었는데 참여 인원은 10월 말 현재 목표 대비 81.1%인 4161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6175명으로 20.4% 증가하고 해외취업률 목표는 66%인 4075명을 취업시킬 계획입니다.

올 10월 말 현재 취업 인원은 161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알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해외 취업이 안 되니까 지난 8월에는 급기야 해외취업연수운영지침을 개정해서 해외취업으로 인정하는 취업의 범위를 늘렸습니

다.

국내 소재 외국계 기업이나 국내기업 등에서 수출입업무 등 해외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도 해외취업으로 인정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게 해외취업입니까? 해외취업 인원 성과를 높이기 위한 편법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청년 해외취업연수사업은 2008년 본예산 수준으로 삭감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고용정책관 이재갑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개 그 기업들이 일반적인 국내기업에 점점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자유구역에 있는 해외투자기업에 한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본사하고 내부 전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한 것이고, 지침만 허용했을 뿐이고 그 사업에 의해서 취업이 인정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렇게 해 놓기는 했어도 실행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홍희덕 위원** 다음에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예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9년에 1억 1400만 원 하던 예산이 올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9억 7600만 원으로 8배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800%.

물론 센터가 두 곳에서 네 곳으로 증설된 이유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가 하는 일은 전직지원센터가 하는 일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2009년도 현재 노사공동채취업센터와 광주경충, 두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177명 구직자 중 33명만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 효과가 대단히 미미합니다. 이것도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기업전직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기업이 자체 전직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퇴직 예정자에게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1개소당 5000만 원의 센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동 사업과 동일한 목적으로 전직지원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사업의 중복성이 있는 겁니다.

현재 기업의 전직지원 서비스는 외부 전문서비스 기관에 의뢰하여 전직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직지원 서비스가 상시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 효과도 미미할 것이므로 이것도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들을 오히려 좀 삭감해서 비정규직 지원 또는 여러 가지 취약 노동자들, 서민 지원 삭감된 부분에 전용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아주 명칭이 유사한 그런 유사 성격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번 집행 상태를 보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조금씩 다른 배경을 가지고 생긴 제도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큰 방향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신중히 해서 결론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대해 위원님이십니다.

○박대해 위원 박대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희덕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하셨습니다만 기업전직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마다 기업전직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퇴직 예정자들이 조기에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의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박대해 위원 내년도 노동부 예산을 보면 노동부는 동 사업을 위해서 예산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은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돕고자 하는 사업 취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측면에서 동 사업 예산 편성이 부적절한 것 같아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의 중복성 문제입니다.

노동부가 설립·운영을 지원할 계획인 이 기업전직지원센터는 사실 현재 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이미 유사한 형태가 있습니다. 전직지원센터와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가 바로 그것인데,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가 전국에 세 곳, 그리고 전직지원센터가 노동부 직영으로 전

국 11곳에 이미 운영 중에 있고, 특히 전직지원센터는 내년도에 11곳에서 16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설치된 고용지원센터에서도 일부 전직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직지원센터가 많은데 기업 내에 설치한다는 이유로 똑같은 기능의 센터를 또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이고 또 예산 낭비의 요소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센터 설립 지원 대상도 문제입니다.

노동부는 기업당 5000만 원의 설치비를 3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한 시설 20곳에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장관님, 맞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박대해 위원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00인 이상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직원들은 전직 지원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직원들보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전직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출신들은 퇴직금 등으로 제2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전직서비스가 더욱 절실한 그런 실정입니다. 300인 이상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20개 선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노동부는 기왕에 전직지원센터,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업의 중복 투자를 막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본 사업 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2009년도 고용지원센터의 전직지원 장려금 28억 원 중에서 10억 원을 삭감해서 내년에 18억 원으로 편성을 하고 이 예산 10억 원을 기업전직지원센터로 신설해 가지고 아마 배정하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러한 제도를 신설할 게 아니라 기존 전직지원센터의 규모를 늘린다는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업 목적이 일부 다른 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아마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사실은 수요자들을 생각하면 단시간 내에 정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박대해 위원 예, 이것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것은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마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와 같이 20개 기업에 5000만 원씩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하고 말이죠, 또 아까 같이 중견기업, 대기업 직원들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이 더 절실한 게 아닌가 이러한 문제, 또 앞으로 20개의 기업을 선정한다면 어떤 기업을 어떻게 선정할지 여기에 대한 혼란책,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다음은 취업장려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111억 원이 반영된 한시적 신규사업으로 저임금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취약 계층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마련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요 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유효 취업자 수가 1525명으로 당초 계획 6000명의 약 25%에 불과합니다. 또한 실제 취업장려수당이 지급된 금액도 당초 예산 108억 원의 1.6%에 불과한 1억 7400만 원밖에 지급하지 못 했습니다. 이제 연말까지 한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업예산 대부분이 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관님, 왜 이렇게 이 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겁니까? 장려하면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좀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우리 담당 실무 책임자한테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대해 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의성 고용서비스정책관 장의성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의해서 금년도에 처음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 취업장려수당 대상 일자리가 조금 낮은 임금 수준 및 좀 열악한 근로 조건이어서 구직자들이 취업을 선호하지 않았던 게 사실인데 그 후 홍보를 좀 강화해서 활성화방안 마련으로 사업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18일 현재 한

1886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4분기 에 취업자가 집중 발생함에 따라서 취업장려수당 예산 6개월 치를 금년에 지급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그러면 말이죠 아까 홍보기간이 짧아서 저조했다는데 지금 연말에 가 가지고 이 사업의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의성 예, 그렇습니다.

○박대해 위원 그러면 말이죠 금년도 예산은 111억 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왜 38억 8000만 원을 배정합니까? 왜 이렇게 많이 65%를 삭감했어 요?

○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의성 저희는 이 사업을 좀 계속하고 싶었었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금년도에 취업장려수당이 출발해서 이것을 한 달에 30만 원씩 1년 치를 지급하는데 금년에 지급하기로 시작한 사람들을 내년에 마무리하는 것만 인정하고 내년에 신규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9억밖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박대해 위원 지금 말이죠 내년에 그러면 노동부에서 취업자 수를 몇 명 정도를 추산합니까? 금년에 6000명 했었는데 내년에 몇 천 명?

○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의성 내년에 4000명 정도를 목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4000명 같으면 말이지요 1인당 한 달에 30만 원씩 6개월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의성 예.

○박대해 위원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말이죠 사실 이 사업이 상당히 정말 장려할만한 좋은 사업인데 금년도에 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홍보기간을 보니까 저조하다고 해서 65%나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1·20억 정도는 증액이 돼야 됩니다.

아까도 4000명이라고 그러면요, 본 위원이 지금 일단 노동부에서 1차적으로 2500명 정도의 유효 취업자 수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명만 하더라도 1인당 1개월에 30만 원씩 6개월 하면 45억입니다. 45억인데 4000명 하면 아마 한 70억 정도 이렇게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한 대로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기재부에서 깎였다는

데 이것은 당연히 한 1·20억 정도는 증액이 돼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의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해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이런 좋은 사업은 꼭 우리 위원회에서 좀 증액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치고 다음은 서면질의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윤 위원님이십니다.

○**김재윤 위원** 민주당 김재윤입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비정규직의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저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은 요원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저는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편성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 원이 결국 불용 처리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가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 편성하였던 일반회계 1245억 원, 고용보험기금 3931억 원은 기재부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러한 예산 구조로 보면 현 정부가 사실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대책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야말로 고용이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안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10년도 예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1조 2000억 원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국가 부채가 너무 늘어나서 힘들다면 노동부의 원안대로 최소한도로 5176억 원은 반영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부의 예산이 96%를 기금에 의존하는 이 구조는 깨어져야 합니다. 매년 노동부의 사업들이 기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구조가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은 노동부 자체의 재정의 건전성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가 지원

은 적게 하고 생색은 내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일반회계에서 예산 지원을 통해서 기금 재정의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현 구조로 가면 오히려 기금이 부실해 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 재정으로 수행해야 될 일자리 사업들이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매년 기금 조달 규모의 0.1%에 불과합니다. 2010년도는 102억 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체 예산은 9조 268억 원입니다.

산재예방 재원은 전적으로 산재보험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재주는 꿈이 넘고 돈은 되놈이 챙긴다는 옛말처럼 정부는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결국은 노동자와 기업주들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으로 각종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2007년 5764억 원의 적자를 시작으로 해서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용보험 적립금이 2006년 9조 3635억 원을 정점으로 해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서 고용보험의 지출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2009년에는 3조 2607억 원, 2010년에는 1조 580억 원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 인식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하고 저희들도 좀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까 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고용보험법 제84조는 여유자금의 적정 규모에 대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은 해당 연도 지출액의 배 이상 1.5배 미만,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은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 규모는 2006년 실업급여 지출의 77.5%, 2007 지출의 65.2%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노동부가 법 규정을 위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적정 규모의 적립금을 확보해서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기금의 국고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노동부 예산이 기금에 의존하고 있는 비중을 줄이고 국고 지원을 늘려서 기금재정을 안정화시키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께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이 자리에서 대책을 말씀드릴 준비가 조금 안 돼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 국가 일반예산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수행할 사업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국가 일반예산으로 투입해야 될 것을 기금에서 쓰고 이게 들락날락하는 것입니다. 어찌면 앞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주머니 돈이 싹짓돈이다 이런 식으로 기금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 기간시설 건립이라든가 훈련장비 확충사업은 장관님이 잘 아시다시피 일반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폴리텍대학의 신기술 시설, 장비 확충 이 사업이 2010년에 444억 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물론 노동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기금으로 지원한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직업체험관 신축사업 이 사업에도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취지와 무관한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일반회계로 재원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장관님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기본적으로 하여튼 기금에서 할 일과 일반회계에서 할 일을 엄격히 좀 구분해서 하는 게 사실은 재정을 절도 있게 운영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현실들이 기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개 일반예산하고 명확한 절도 있는 원칙이 잘 안 돼 있어서 하여튼 저희 노동부라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운 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의하면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수행을 위해 회계연도마다 기금 지출예산 총액의 3% 범위에서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2010년도 산재보험기금의 산재예방 관련 일반회계 전입금은 92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여유자금 운용을 제외한 내년도 산재보험기금 지출계획액 4조 7970억원의 0.2%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이것 법 규정에 비추어 봐도 지나치게 과소 계상된 것 아닙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산재보험사업에서 산업안전·산재예방·기타 부수적 경비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증액시켜서 국고 부담을 충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고 부담에 상응하는 부분은 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책임 준비금으로 충실하게 적립하고 보험급여를 개선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도 개선사항으로 저희들이 하고, 이것은 정부 내에서 예산당국하고 상당한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에 많이 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김재운 위원** 나머지 예산 증액·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의하겠고요, 제가 부산 사격장 참사와 관련하여 우리 장관님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피해자 분들이 치료비가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분들이,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십니다. 관광안내원도 지금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못한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노동부의 범위 내에서 벗어났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어처구니없는, 제가 볼 때 이것이야말로 인재입니다. 부산 사격장 참사는 인재 중의 인재입니다. 미리 사전에 점검하고 마무리했으면 충분히 이런 피해가 나지 않을 사고가 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나 몰라라가 아니라 책임성을 좀 가지고,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산재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찾

아보시고 어떻게든 국가가 이 분들에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지금 이 피해자 분들은 ‘정부의 대책은 허수아비 대책이다’ ‘허수아비 대책 본부다’ ‘치료비·보상비 모두 손놓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노동부는 치료비가 막막한 피해자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꼼꼼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수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이화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노동법률상담소 예산 관련해서 질의한다 그랬는데 담당하시는 분……

○**노동부노사협력정책국장 전운배** 노정국장 전운배입니다.

○**李和洙 委員** 4년 동안 동결되다가 내년에 1억 6700만 원 삭감했지요?

○**노동부노사협력정책국장 전운배** 예, 맞습니다.

○**李和洙 委員** 인원이 줄었습니까?

○**노동부노사협력정책국장 전운배**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법률구조사업 예산은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지금 삭감이 된 부분은 연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삭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李和洙 委員** 여기 상담원들이 지금 노동부 직업상담원 임금수준의 70% 정도 받고 있어요.

○**노동부노사협력정책국장 전운배** 직업상담원 임금이 월 19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한국노총 상담원의 임금은 185만 원 정도로, 2년 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 올해부터 격차를 많이 해소를 시켰습니다.

○**李和洙 委員** 전년도에 예산 증액 10억 됐다가, 예산소위에서 동료 위원님들 도움으로 15억 원으로 증액했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부다 삭감됐거든요.

○**노동부노사협력정책국장 전운배** 그렇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래서 올해도 예산 10억을 더 확보해서 올릴 수 있나요?

○**노동부노사협력정책국장 전운배**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李和洙 委員** 10억을 올려주시고……

들어가세요.

장관님, 직업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사업 아시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알고 있습니다.

○**李和洙 委員** 이게 한국경제TV와 3년 계약을 체결했는데 시청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아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和洙 委員** 0.072%. 이 사업이 잘 된다고 보시나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제가 보기에 지금으로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李和洙 委員** 그런데 매년 50억 원을 집행했는데 계속 시청률이 올라가지 않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50억 지원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조금 더 주는 것으로 됐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앞서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 문제 지적하셨습니다. 하여튼 직업방송 문제는 DMB, 인터넷, IPTV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구인자나 구직자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시스템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자리 연결이나 이런 효과성을 아주 높일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서 방송이 좀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개편 운영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50억이면 청년인턴 125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돈인데 좀 효율적으로 이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李和洙 委員** 다음, 디딤돌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알고 있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런데 이게 5개월간 81만 원의 인건비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2010년에는 독립적인 사업으로 편성했는데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계신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李和洙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디딤돌일자리는 취업의욕 고취와 숙련도 제고를 목

적으로 하고 있는데 노동부에서 해석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 방향과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노동부장관 임태희**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근거라기보다도 이 부분은 고용정책기본법에 정부가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이것에 근거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러니까 법적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금년 사업 실적과 내년도 예산은 대략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리고 특히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정상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지원이 가능하고 예산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책목적이 분명하고 이러면 국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법적 근거뿐만이 아니고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李和洙 委員** 그런데 금년 5월부터 9월까지의 집행률이 14.6%였거든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李和洙 委員**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또 57억을 증액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하시는 분?

○**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의성** 고용서비스정책관 장의성입니다.

디딤돌일자리 사업은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시기가 좀 늦었고 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홍보가 좀 부족했는데 7월부터 참여인원이 계속 증가해서 지금 11월 13일 현재 8700명 수준입니다. 목표인원의 87% 달성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1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또 예산집행률도 많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러니까 57억 증액해도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의성**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446억이고요 내년에는 500억입니다. 또 목표인원도 1000명 정도 늘기 때문에 열심히 취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알았습니다.

장관님,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알고 있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러니까 이게 기업에서 정규직 채용 인원을 인턴으로 유도해서 그 혈세를 갖다가, 기업에서 인턴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타 먹으려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청년들한테 또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운영을 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평가해 본 결과 정규직으로 취업이 확정되는 경우가 약 80%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투입에 비해서는 성과가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평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런데 고용보험사업 중에서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사업과 유사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이 있거든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李和洙 委員** 청년인턴제가 시행되면서 이 사업의 지원실적은 대폭 감소했는데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 검토를 한번 해 보셨나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고용정책관 이재갑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청년인턴제와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일정부분 중첩이 되는 영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출실적이 많이 감소되어 있는데 그것이 청년인턴제의 영향도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금년도에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취약청년층으로 대상을 대폭 줄인 것에 기인한 바가 큼니다.

○**李和洙 委員** 그러면 중복되는 사업이라면 통합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맞지 않나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저희는 목적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취약청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건비 보조사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李和洙 委員** 2008년도에는 2만 7000명, 798억 집행을 했는데 청년인턴제가 시행되고 올 10월까지 7700명, 193억 원이 집행됐거든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2008년도에 대규모

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대규모의 지출이 있었던 것은 취약청년층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대졸자에게까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했던 관계로 4중 손실 효과가 대규모로 발생했다는 평가를 저희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자체를 취약청년층으로 아주 좁게 한정하였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출이 그만큼 줄게 되었습니다.

○**李和洙 委員** 여기서 위탁사업비 87억 원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위탁사업비라고 하시면……

○**李和洙 委員** 청년인턴을 모집하기 위한 대안 이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알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위원님이십니다.

○**김상희 위원** 일반적인 것은 아까 말씀을 다 드렸고 위원님들도 중복적으로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워낙에 책정했던 5176억 원 다시 반영토록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좀 더 확대해야 될 부분으로 사회적 기업 인건비지원 사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 확충사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디딤돌일자리 창출사업, 취업예로 계층 직업진로개발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재편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이 지난해 대비 340억 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는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이 397억 원 축소됐고 디딤돌일자리 예산은 57억이 증가했습니다. 디딤돌일자리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는 방금 이화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해서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가 2009년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 중 인건비 명목으로 1인당 84만 원, 12개월 지원해 왔던 예산이 있는데 지금 2010년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 부분은 노동부장관께서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만들고 싶다고 하신 부분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부가 고용창출을 한다면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말이 다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됐던 디딤돌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를 하시고 사회적 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삭감 필요가 있는 부분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딤돌일자리 사업은 사업의 실효성도 문제지만 법적 근거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아까도 지적이 됐는데 노동부장관께서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기존 사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새 사업으로 신규 도입됐던 것이거든요. 법적 근거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고용지원센터의 고용서비스인턴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인턴들의 이·퇴직률이, 2009년도 보면 9월까지 채용인원이 1557명인데 이·퇴직률이 23.2%입니다.

사업 이탈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인턴들이 이 업무에 적절한가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인턴이 이런 고용서비스 업무를 담당해서 오히려 일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취업지원 사업 이것도 국감에서 그렇게 많이 지적이 된 것인데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라디오 주례연설에 나와서 또 이 부분 강조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잘못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은 지금 각 부처에서, 특히 노동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위원님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지원 청년인턴제 부분입니다.

청년인턴제 부분이 지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하고 중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규직의 일자리를 오히려 빼앗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9년 9월 17일 현재 인턴채용자 수 2만 3679명 중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1230명입니다. 5.2%입니다.

저는 이런 사업들, 작년에는 갑자기 경제위기에, 어떻게 보면 허겁지겁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감액해야 될 부분을 죽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공감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소위원회에서 항목별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앞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발 국회에서 지적하는 부분, 지금 정부가 국회에서 지적하면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라고 또 정부는 마음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냥 여기 와서 하는 말씀 다르고 또 부처에 가서 일하는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노동부가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정말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확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 장관도 공감하시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공감합니다.

○김상희 위원 그리고 사회안전망의 가장 또 핵심이 실업급여지요? 실업급여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

○김상희 위원 실업급여.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김상희 위원 실업급여 혜택이 확대돼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당연하시지요?

지금 당장 일자리 대책으로 청년인턴·희망근로로 여러 가지 임시방편적인 사업들을 했습니다. 65만 개 정도 됩니다.

6개월 동안 청년인턴·희망근로사업에 참여했지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인턴들이 6개월 동안 일을 해도 휴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급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180일이 미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들을 모아서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고용보험료를 냈는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청년인턴과 희망근로, 계속 아직도 이런 단기 임시방편적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김상희 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제가 보고를 받았습시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수십만의 임시방편적인 그런 노동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이 자기들은 고용보험 냈는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

○김상희 위원 지금 근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장관님, 실업급여가 실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정부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물론입니다.

○김상희 위원 그래서 까다로운 수급조건 완화라든가 수급기간 연장 등 이런 것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저도 냈고요, 강성천 위원님 홍희덕 위원님 원혜영 위원님이 전부 이 관련 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지금 내고 있는 것은 최저구직급여일의 부분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보험가입일수를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는 것을 거의다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이 부분만이라

도 우리가 채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정도라도, 이 제도를. 좀 보완을 해서 실업급여를 확대해야 됩니다, 수혜자를.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 취지와 공감합니다마는 이게 기금의 재정 사정이라는 것을 또 고려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김상희 위원** 그런데 구직급여 기간을 지금 180일에서 120일로 줄였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

○**김상희 위원** 1600억 원 듭니다. 장관께서 이것 준비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1600억 원 정도 드는데 지금 올해 4대강 예산 5조 3000억, 정부가 얘기한 5조 3000억의…… 들으십시오.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 수준을 높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는 그런 예산과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하여튼 기본적인 취지에 공감하는데 계속 저희들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가 재정 마련이 되지 않으면……

○**김상희 위원** 장관님, 지금 불필요한 사업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있습니다. 그것 다 삭감하시고요. 이것 1600억밖에 안 됩니다. 이것 1600억 지금 내년에 쓸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지금 하여튼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사업 조정을 해서라도 이쪽이 좀 시급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도 심지어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다만 어쨌든 이게 다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저희들이 해서 이것은 확대해 나가야 된다 하는 거지요..

○**김상희 위원** 당연히 돈 들어가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얼마 씩습니까? 지금 8%도 못 쓰고 있습니다. 다 기금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

렸듯이 그 부분은 기금이 해야 될 일과 우리 일반회계가 해야 될……

○**김상희 위원** 이것 1600억 원 기금이 할 일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역할에 대해서……

○**김상희 위원** 이런 것 기금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께서 이 부분은 틀림없이 추진하셔서 우리 사회안전망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저도 하여튼 사회안전망이 확대돼야 근로자들의 여러 가지 면에서 조건이 개선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선 위원님이십니다.

○**박준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준선 위원입니다.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볼까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박준선 위원** 지금 인구가 줄고 그리고 아이들도 적게 낳고, 노령인구가 늘고, 경제활동인구는 줄고, 여러 가지 인구대책이나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리고 앞으로 점점 중요해지고 결국은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고 하는 것은 우리 2세들을 많이 낳고 잘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명이 늘고 좀 있으면 90세 100세까지 산다는데 40대 50대에 은퇴해 가지고 4·50년을 놀면서 지낸다, 이걸 아주 비극 아니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장관님, 파고다공원 가 보셨어요? 한번 가 보십시오.

○**노동부장관 임태희** 가지 못하고 지나가면서 늘 관찰합니다.

○**박준선 위원** 한번 시간을 내서 가 보십시오. 우리 노동부 고용정책 담당 실국장님들과 함께 한번 가서 노인네들이 힘이 부족해서 그러시는 건지 힘이 남아돌아서 그러는 건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4.3배가 는 56억 남짓을 계상했더라고요.

맞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맞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뉴스타트 프로그램 좋은데 이 예산을 56억 원, 앞으로 더 늘릴 수도 있는데 이 예산을 얼마나 적절하게 쓰느냐인데……

담당 국장이십니까?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예, 고용평등정책관입니다.

○**박준선 위원** 이 56억을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개략적으로 짧게 얘기해 보세요.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우선 현장연수를 할 때 씁니다.

○**박준선 위원** 현장연수?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예, 그리고 기업체하고 연결시켜서 할 때 합니다, 훈련을 하는데요.

○**박준선 위원** 그러면 주로 집행기관은 어디예요?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지금 산업인력공단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박준선 위원** 산업인력공단?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예.

○**박준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고령자 해외취업 프로그램에도 10억 원이 배정돼 있지요?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내용을 보니까 250명에게 6개월간 60만 원씩 지원해서 해외연수를 하고 이런다는 것 맞아요?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예, 맞습니다. 해외연수는 아니고 현장연수, 실제로는 국내연수입니다.

○**박준선 위원** 국내연수?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예.

○**박준선 위원** 그런데 이게 참 말은 그럴 듯한데 고령자들을 상대로 해서 해외취업을 한다, 이게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저희는 예산이 좀 적게 반영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에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저희부는 좀 예산이 적게 편성돼 있어서 조금……

○**박준선 위원** 다른 데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예를 들면 지금 KOICA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있

습니다. 한 7000만 원 정도, 연간 예산이 그 정도 돼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령자들, 50 넘으신 분들이 현장연수를 해서 해외로 취업을 한다?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게 현실성이 있다는 겁니까?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일부는 지금 수요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아,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예, 지금 광주 지역은 해 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있고요, 해외에서 구인처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게 조금……

○**박준선 위원** 구인처?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예.

○**박준선 위원** 구인처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고령자들이 여기에서 언어도 틀리고 그다음에 동남아나 이런 데 가 가지고 임금도 낮은데 가서 일하려고 하겠어요?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조금만 조건만 맞으면 가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래요?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예.

○**박준선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좀 하고 그래서 하는데, 우리가 그 돈을 차라리 일반적인 재교육, 폴리텍대학이나 이런 데에다 배정을 해 가지고, 일단 현장연수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장관님께 좀……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박준선 위원** 지금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그다음에 해외 청년글로벌 리더 양성 해서 하는데, 참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일시적으로 그렇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시스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으로 좀 쓰는 게 어렵다. 예컨대 청년리더 같은 경우에도 한국폴리텍대학이 전국의 곳곳에 있고, 그러면 거기에 영어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노령층의 어떤 그런 재교육……

문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노령층의 일하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그동안 본인들이 평생을 대학 전공이나 고등학교 때부터

해 왔던 일하고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그다음에 그것을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면서 새롭게 하나의 기구를 만든다든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거기에 추가하는, 그리고 점차 그 비중을 늘려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좀 이따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령 우리 노인…… 이번에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삭제됐다고 하던데, 50플러스세대 지원센터 이것에 대한 어떤 그런 설립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고용보험기금 예산안에 1억 2000만 원인가를 편성 요구했으나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취업 고용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박준선 위원 거기에 이런 50플러스세대 지원 파트를 하나 뒤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기존에 시스템이 다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재취업이나 이런 것은 수요자와 고용 구인처—우리 국내의 경우에—구인처와 본인의 어떤 그런 것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이 제일 우선이고 그다음에 시스템상 구인처와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이어주는 것, 예컨대 고용지원센터라든가 그다음에 교육하는 거라면 산업인력공단도 있지만 폴리텍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해외로 나갈 때는 영어 교육 그다음에 국내에 있을 때는 결국은 직업 재교육, 한다면 결국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준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삭감되는 것 그런 것도, 기재부가 하는 것도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고 새로운 뭘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시험적으로 한다면 예산이라는 것이 그냥 좀 낭비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것 또는 올해 소위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지금 특히 아까 50플러스세대 지원센터에 대해서 고용지원센터에다가

기왕에 사람 담당자만 하나 뒤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은 어떠냐, 저는 검토 가능한 대안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앞으로 저희들이 은퇴 후,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사회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세대에 대한 취업대책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차적인 직장생활보다 노후생활의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취업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회적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큰 과제로 생각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근로에 대한, 노동에 대한 어떤 그런 관념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좀 하고 그리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실국장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40대부터 50대 좀 있으면 은퇴하고, 장차관 되시면 다 행이지만 아니면 은퇴하고 본격적으로 놀기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때 지금 많은 그런 근로자들이나 사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40대 50대에 은퇴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은퇴하고 놀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로 취업하고 새로 교육받고, 그것 염두가 안 나지요.

그런 준비되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도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본인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가의 고용시스템에서 저는 한국폴리텍대학이나 이런 교육기관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저는 한국폴리텍대학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늘려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설보수하는 데 급급해 가지고는 안 되고 인원이나 그리고 그쪽에서 사회에 있는 재취업 프로그램이라든가 해외에 취업하는 부분들과 연계해 가지고 계속 커져야 될 기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저희들이 이제 조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고령자들의 경우에는 대개 경험과 이미 상당한 정도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우선적으로 일할 의욕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아까 해외 취업 일자리도 결국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폴리텍 대학에서 고령자들의 경우에는 어떤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이거 수요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고 수요조사를 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준선 위원 그래서 하여간 기존의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되 그 시스템의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하는 것 이것을 좀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지사가 없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박준선 위원 충남, 경북, 전남인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이라는 것이 매우 큰데 지역적으로 지사가 없으면 그곳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공간적으로?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박준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이것은 당연히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이두아 위원님이십니다.

○이두아 위원 지금 예산안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 현황이지만 또 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상임위를 개최한 적이 없어서 현안에 대한 질의가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산안 질의를 준비해 왔지만 현안에 대해서 우선 장관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존경하는 박준선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강성천 위원님도 이 부분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수노조 문제랑 관련해서 장관께서 11월 10일 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언론사 사회부장 간담회에서 “법안은 국회에 가지 않고 시행될

것……”, 또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방안은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행정법규로 만들면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다고 언론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의 창구 단일화 반대 입장에서 주장하는 위헌 논란이 있는 것은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서는, 특히 복수노조의 창구단일화 입장과 관련해서는 헌법 33조에서 규정하는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게 되고 소수 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에서 규정하는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헌법 37조2항에 반해서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가 된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위헌 논란과 함께 법률 유효의 한계를 벗어나는 게 아닌가 이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행정법규로 창구단일화 방안을 규정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죽 말씀드린 이런 비판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입장을 좀 정리하셔서, 그전에도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법규로 절차와 방법 이런 것을 정하실 것인지 행정법규로 규정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행정법규로 규정을 한다면 이 부분은 언제까지 행정법규로 뭘 정하고 법률 개정은 언제까지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시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 부분은 참 저희도 노동부 내에서 토론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는 우선 부칙에 나와 있는 창구단일화를 위한 방안을 노동부장관이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해서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 당연히 창구단일화에서 교섭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넣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는 법률로 가야 가능한 법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경영계에서 얘기하는 최소 교섭 요건을 가입 대상자의 몇십 %로 규제한다든가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든 가장 소망스럽기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서 결국은 시행이 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법규가 그대로 시행되게 될

때 노동부장관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법규 이외의 절차와 방법을 정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가령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규정은 안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복수노조를 단일화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당연히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그대로 시행되게 되면 노동부장관으로서 전혀 부칙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법으로서 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복수노조 단일화를 위한 절차를 규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당연히 법으로 정해야 될 부분은 포함을 시키지 못하는 거지요, 당연히. 왜냐하면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문제는 저희들이 부당 노동행위라고 하는 것이 노동법에서 정해진, 행정부에 법에서 위임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법에서 행정부에 일부 제한적으로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부칙에서 창구단일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본질적인 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법규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 안 되면 그러면 이 제도는 시행할 수 없는 것이냐, 부칙에서는 행정법규 창구단일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러면 노동부장관이 전혀 아무 조치도 안 하면 이 법 시행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이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는 본질적 부분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장관은 당연히 행정법규로 규정할 부분은 규정해서 가야 된다 하는 내용을 제가 설명한 것이 그렇게 보도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두아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질의를 드릴 게 지금 교원노조랑 공무원노조는 사실상 복수노조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수노조에 대한 단일화 방안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장관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두아 위원 어디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

니까?

법에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좀 해 보시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것은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이두아 위원 단일화 방안이 교원노조랑 비례대표로 되어서 시행령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세계적으로도 아마 이런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민간이랑 공공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방안에 대해서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수노조가 있고 노조의 단일화에 대해서 규정을 둔다면 민간이든 공공이든 통일된 일관된 규정을 갖고 있다고 지금 전교조 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이것도 시행령에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복수노조의 창구단일화 방안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두아 위원 아니면 공무원노조나 교원노조, 지금 전교조 쪽이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이 기회에 교원노조 이런 쪽의 창구단일화 방안이 적절치 않다, 그것을 바꾸어 달라, 지금 6자 합의에도 자기들도 포함이 시켜 달라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좀 일관되게 입장을 취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노조, 교원노조는 허용이 되어 있고 단일화 방안도 마련이 되어 있고 이러는데 여기는 이렇고 또 그냥 민간기업에 적용될 노동관련법은 또 다르게 규정을 하고, 법률에 들지 시행령에 들지 이런 것도 일관되게 노동부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렇게 다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노조나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자기들도 이 기회에 바꾸어 보자 이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기본적으로 별도 법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하고 교원노조하고 공무원노조가 별도 법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말씀을 확정적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노조의 일반적인 원칙에 의해서

창구단일화가 되어 있고 또 창구단일화를 하기 위한 공익위원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을 하면 그 원칙을 적용해서 다른 법제들의 경우에도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노동부 입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 토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법체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토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두아 위원 입장을 정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노조전임자 관련해서도 부칙에 조항이 있고 복수노조 관련해서도 사실상 부칙에 조항이 있습니다, 본법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부칙이라는 게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해서 기금 관련해서 부칙에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는 노동부 입장이 부칙이라는 게 법이 시행되면 이 부칙은 사실 효력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부칙 전체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입장을 빨리,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빨리 취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언제까지 이 규정을 만들 것인지 절차와 방법과 관련된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닌 부분을 정하실 때 그것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정할지 말씀을 좀 해 보시라고 한 게 이런 부분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노동부도 일관된 해석을 취해야지 노조법 부칙 노조 전임자 기금과 관련해서는 12월 31일이 되면 효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것은 계속 또 효력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도 빨리 입장을 정리하시고 조항을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 점은 금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니까 가령 그대로 법제를 둔다면 금년 내로 행정법규든 법률에 근거를 두든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두아 위원 빨리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관련해서 입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것은 금년 넘어가면 정할 근거가 없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두아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시간을 따로 주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서면 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진 위원님이십니다.

○조원진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자 같은데 장관님, 6자 회의가 상당히 진행은 되는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맞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25일까지인데 25일이 일몰이라기 보다는 그 막후가 25일 전후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ILO의 문제도 있지만 FTA하고 맞물려 있어 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풀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양대 노총도 그렇고 행정부나 국회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지혜를 짜내야 되는데 만일 국회에서 복수노조나 전임자 부분에 대한 법을 만들어서 ILO와 FTA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정확하게 말씀의 취지를……

○조원진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법화를 시켜서 행정부에서는 하고 싶은데 국회가 이렇게 반대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러한 부분들도, 미국의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기후 변화에 관련된 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보험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사실은 미국 정부하고 의회하고 다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봐서는 정부에다가는 요청을 하지만 의회의 핑계를 대거든요.

복수노조나 전임자의 부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법률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원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노동부장관 임태희 조금만 제가 더……

그런데 지금 어떻든 누누이 약속을 해 왔고 이

것을 또 유예를 하면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들이 늘 세계에서 여러 개 지적받고 있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노사 관계 선진화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후유증을 겪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행해도 정착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비용을 치르게 될 테고 시행하지 않아도 이것은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원진 위원** 연착륙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용의 부분을 어떻게 분산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가 가져야 될 비용, 그다음에 양대노총이 지불해야 될 비용, 그다음에 경영 쪽에서 지불해야 될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잘 분산할 것이냐, 또 시기를 어떻게 갈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염두를 두셔 가지고, 더 이상 유예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래서 유예하지 말고 하되 연착륙시키자 하는 겁니다.

○**조원진 위원** 국회에서든 정부든 6자회의에서든 어떤 결과를 가져서 해야 된다, 그런데 너무 ILO의 부분에 대해서 얽매이다 보면 또 실착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더 지혜를 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동부에 있는, 특히 여기 간부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예,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입니다.

○**조원진 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산재로 지불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경제적인 손실액으로 보통 이야기할 때는 17조로 이야기를 하고 산재보험급여로 이야기할 때는 지금 4조 원 정도……

○**조원진 위원** 지금 우리 2010년도 예산 보더라도 산재보험급여가 4조, 산재근로자 재할·복지가 1080억, 그리고 산재보험사업의 위탁 운영 사업이 2300억, 산재예방이 1400억, 사업장 보건 관리, 클린 사업장 등을 합쳐서 약 1150억 정도 되는데 결과는…… 장관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자, 우리가 산재율을 줄여야 됩니다. 가장 지금 국격을 갖춰야 되는데 노사문화하고 맞물려 있는 게 가장 후진적인 산재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재율이라는 게 바로 예산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산재 예방에 대한 홍보라든지 산재 예방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을 쓰지 않으면 7조, 우리 지금 예산으로 하더라도 약 4조 8000억 정도가 산재 관련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매년 그런 예산들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공단에 가서 말씀드렸던 게 지금 우리나라의 건설 사망자가 1년에 530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370명 정도가 추락사고입니다, 추락사고.

제가 데이터를 좀 드릴까요? 지금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산재안전보건공단 전체 인원이 1331명인데 지금 공단 전체 직원의 반이 건설 사망자로 죽습니다. 이것은 사망자만 얘기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4분의1이 추락사고로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감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는 추락사가 가장 정말 OECD에서 부끄러울 정도로 저개발 국가의 전형적인 사고인데 이 추락사를 획기적으로 없애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사장께서 그 제안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방안은 돈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예산이 나와야 됩니다. 이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감을 왜 하는가?

들어가십시오.

장관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노동부가 해야 될 일이 노사문화의 선진화도 중요하지만 산재를 OECD 수준에…… 3분의 1로 줄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조원진 위원** 이것은 전 사업장 또 전 경영자, 전 노동자 그다음에 정부, 국회, 다 모든 부서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추락사고를 보면 참 부끄러울 정도의율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OECD 국가의 25배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감에서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도 예산 하나 안 올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 이제 바꿔보자는 거지요. 노동부가 과거의 타성을 벗지 않으면 우리가 선진 문화, 복수노조 전임자 이것 실시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실시한다고 해 가지고 선진 노사문화가 되겠습니까? 노동문화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7조 정도의 비용을 유발하는 이 산재를 획기적으로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서는 예산 심의 전에 말이지요, 내년도에 특히 이 건설사고의 사망자, 500명이 넘는 건설사고로 돌아가시는 사망자에 대한 부분 또 추락 사망자에 대한 부분은 획기적으로 없애서, 여기가 가장 후진형 산재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 시작하면 나머지 산재 부분도 자동적으로 많이 줄어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얼마를 쓰더라도 2010년도에 특히 국회에 계셨던 우리 장관님께서 획기적으로 바꿔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산 항목 보면 작년 예산 항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산재를 획기적으로 없애는 해로 가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비정규직 이동경로조사 신설은 40억 중에서 고용보험으로 25억이 잡혀 있는데, 나머지 39억에 대한, 사업체 비정규직 실태조사 해서 8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31억 추가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40억 중에서 16억, 사실은 41억 하고 39억, 전체 80억 해도 모자라는 돈인데 이 돈을 거의 3분의 1로 깎아버렸으니까 이것 바꿔야 됩니다. 좀 바꿔 주시기 바라구요.

15페이지에 보면 새터민 문제가 나오는데 새터민 직업훈련이 지금 한 43억 되는데 신규 실업자 등 직업훈련으로 통합을 시켰는데 이것 담당자 누구십니까?

○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임서정 예.

○조원진 위원 이 신규 실업자 등 직업훈련으로 얼마 잡혔습니까?

○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임서정 새터민 말씀하십니까?

○조원진 위원 항목은 바뀌었는데 새터민에 대한 직업훈련, 이것 전체 금액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임서정 56억입니다.

○조원진 위원 56억 잡혔습니까? 지금 그러면 전체 43억에서 13억 플러스 된 겁니까?

○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조원진 위원 항목을 찾을 수가 없는데 어디에서 찾지요, 이것?

○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임서정 실업자 훈련 전체를 한 항목으로 통합을 해 가지고요…… 새터민 훈련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조원진 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은 새터민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부분 아닙니까?

○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임서정 예.

○조원진 위원 그것을 왜 하필이면 신규 실업자 등 직업훈련에 넣어 가지고 그 항목 자체를 없앴느냐 이거지요.

○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임서정 내역 외에는 새터민이라고 정리해서 넣었……

○조원진 위원 자, 그것 검토해 주시고요.

○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임서정 예, 알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다음에 국가에서 G20 내년도 개최한다고 대통령께서도 좋아하시고 아, 우리가 이제 진짜 품격 있는 G20 국가로서 간다, 그리고 OECD 국가하고 개발도상국가의 링크 역할을 하겠다, 대통령 나가시면 외국에서 계속 그 얘기하시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미납된 게, 한 45억 체납 금액이 있는데 이것 어떤 항목에서 뿔든지 간에 이 체납 금액, 국제적으로 망신이지 않습니까?

내년도 G20 한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주최국인데 국제적으로 체납액 안 내고 하는 이런 부분 좀 없애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하겠습니다.

기능올림픽 관련, 산업인력공단이사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예.

○조원진 위원 국감에서 지적한 부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계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따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지방 경기의 입상자들은 아무런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그 또한 예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그것은 예산 필요 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어떻게 하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우리 지방 지사가 24개인데 내년에 기관장 업무 평가에 그 지역에 있는 기업하고 우리 인력공단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기능대회에서 입상한 사람들을 취업시키는……

○조원진 위원 MOU가…… 입상하는 데 어떤 특례 지원금이라도 좀 주고 해야지 입으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중간에 없어지는 거지요.

지방 입상자들에 대한 대책 세우셔 가지고, 지방 기능올림픽 입상자들도 잘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그것은 지자체에서 시상을 일부 주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넣으십시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예.

○**조원진 위원** 그래야지 지속적인 게 됩니다. 만약에 이사장님은 하시는데 이사장님 끝나고 나면 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그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예, 알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들어가십시오.

장관님, 제가 여러 가지 말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비정규직 때문에 5차 연석회의를 해서 양대 노총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봤습니다. 장관님께서 6차 연석회의를 해서 다시 또 우리 정부하고 양대 노총이 앉아서, 경영자들이 앉아서 회의를 할 수 있는 틀을 또 만들어 봤지 않습니까?

이게 시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은 많이 힘들지만 어떠한 안을 도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도출 안이 와야지 국회가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조원진 위원** 내년도는 산재 부분, 특히 건설 사망자, 사망자가 500명이 넘으면 중상을 입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을 획기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여기의 3분의 1만 줄면 예산이 얼마나 줄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3분의 1 정도 줄이는 그런 목표치를 해 주시고요.

기금을 자꾸 쓰다 보니까, 제가 말씀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기금의 불안정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부분을 쓰는데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동부 소관의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노동부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운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소위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대체토론 중에는 권선택 위원님, 강성천 위원님, 이화수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박대해 위원님, 홍희덕 위원님, 박준선 위원님, 조원진 위원님 그리고 이두아 위원님으로부터 각각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노동부는 서면답변서를 작성해서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위원회의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지 못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강성천	권선택	김상희	김재운
박대해	박준선	이두아	이찬열
이화수	조원진	추미애	홍희덕

○**출장 위원(1인)**

원혜영

○**청가 위원(1인)**

조해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원창희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노동부장관	임태희
차관	정종수
기획조정실장	이채필

고용정책실장	신영철
노사협력정책국장	전운배
근로기준국장	박화진
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욱
정책기획관	정철균
국제협력관직무대리	한창훈
고용정책관	이재갑
직업능력정책관	임서정
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고용서비스정책관	장의성
공공노사정책관	이성기
직무대리	문기섭
대변인	장화익
감사관	김대모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직무대리	이원보
중앙노동위원장직무대리	김원배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유재섭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노민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김선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정인수
한국고용정보원장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이사장	허병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전운기